

NGO SERIES #06



반미운동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김광동

요 약 문

대한민국에게 미국은 해방과 건국, 그리고 독립과 변형과정에서 유일무이한 동맹국이자 파트너(partner)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이후 한국사회에서 시작된 반미운동에 따라 전통적 대미인식과 태도는 커다란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이제는 가장 싫어하는 나라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미국인도 한국을 우호적이기보다는 중립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미국을 주한미군 문제로만 보는 시각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경제·사회적 모델과 가치,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지속적 변형이라는 포괄적 관점에서 본 결과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경제 및 무역국가이자 세계질서를 만들어 가는 주도 국가이면서도 한국과는 국가안보만이 아닌 경제·사회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앞으로도 가장 관계를 강화해야 할 국가 중의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격화되고 있는 반미운동은 국가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럽고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목적의식적인 정치 이데올로기적 운동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근원에는 북한의 반미전략과 우리 사회의 친북 좌파세력의 연대활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반미운동은 세계적 차원의 냉전해소와 한국의 잘못된 ‘햇볕’정책으로 더욱 확대되었으며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기대적 의존심리와 경제성장에 따른 자부심 등이 반미운동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왔다.

한국사회에서의 반미운동은 안보(security)를 취약하게 만들어 사회불안의 원인이 되고 방위역량 저하 및 방위비용 증대를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미군의 철수와 재배치 등과 관련된 안보불안의 가중에 이어 첨단 현대전 능력을 약화시키고 대북 정보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반미운동은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안정 기반을 훼손시키고 반서구주의, 반시장경제적·폐쇄적 민족주의와 ‘민족 공조’적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세계주의와 상반된 ‘자주’나 ‘주체’라는 인식과 태도의 확산으로 우리 경제능력에 심각한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반미운동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불러일으켜 우리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한 혼란과 가치전도를 확대시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이고 만들어가야 할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 감각을 상실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반미운동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보편가치를 확고히 하고 그 보편가치의 확대와 정착을 위해 미국과 함께 어떻게 협력하고 연대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와 북한 사회를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 가치지표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이 개발되어야 하며 보편 가치에 입각한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목차

요 약 문	2
I. 서 론	6
II. 미국과 한미 관계	8
1. 세계에서 의 미국	8
2. 한미관계의 성격	11
III. 반미운동의 기원과 확산 원인	14
1. 북한 반미전략과 친북좌파의 연대	14
2. 냉전해소와 중국의 성장	18
3. 성장에 따른 자부심과 ‘햇볕’정책	20
IV. 반미운동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24
1. 안보(security)취약에 따른 사회 불안정	24
2. 국방역량 저하 및 비용 증대	27
3. 첨단전쟁 능력과 군사정보의 취약	30
V. 반미운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33
1. 경제 안정기반의 훼손	33
2. 반자유 · 반시장주의	35
3. 경제 능력의 잠식	37

VI. 반미운동이 사회모델에 미치는 영향: 지향 가치의 변화	40
1. 국가 정체성(identity)의 혼란	40
2. 사회적 가치의 전도	42
3. 책임 회피적 폐쇄주의	43
VII. 결 론	47
참고문헌	49

I. 서론

건국 55년을 맞은 대한민국에게 미국은 해방과 건국, 그리고 독립과 발전에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어온 유일무이한 나라였다. 한국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식민지 국가상태에 있을 때 미국은 연합국을 결성하여 우리 민족해방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북한이 공산주의의 지원을 받아 침략했을 때도 미국은 유엔군을 조직하여 한국 공산화를 막고 독립국가를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 후 미국은 한국이 제2차 세계대전후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며 세계사적 성공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동맹국이자 파트너(partner)였다.¹⁾

한미수교 100주년을 기념한 지난 1982년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우리 국민의 60.6%는 미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꼽았고, 어느 누구도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꼽지는 않았다.²⁾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이후 한국의 재야 운동단체와 학생운동권을 중심으로 펼쳐지기 시작한 반미운동의 결과 전통적 한국인의 대미인식과 태도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1990년 이후 지표는 급격한 변화를 보여준다.

문화방송(MBC)이 1990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상당수가 한국분단이 ‘미국의 세계지배전략 때문’이라고 답했고, 응답자의 51.2%는 주한미군은 가급적 빨리 혹은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단지 20.4%만이 미군철수에 반대하였다.³⁾ 최근 여론조사는 더욱 악화되어 국민의 대다수인 63%가 미국에 호의적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고 표명했고, 국민 56%는 반미감정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구나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18.5%가 미국을 선택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23.7%는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미국을 선택하였다.⁴⁾

반미감정이 뿌리깊게 자리잡히면서 어느덧 미국은 우리에게 가장 우호적 국가에서 가장 불편한 국가가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한국인이 성조기를 태우고 미국 대통령을 화형에 처하는 장면을 언론매체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됨에 따라 한국에 대한 반한(反韓)감정도 확대 일로에 있다. 미국외교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국을 ‘좋은 동맹(good ally)’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46%인 반면 한국은 ‘동맹이 아니다(not an ally)’라고 생각

1) UNDP(유엔개발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1960 ~ 1995년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에서 한국은 7.1%로서 조사된 174개국중 1위였으며 소규모 국가인 싱가포르(6.4%), 시프러스(6.2%)가 2위, 3위를 기록했다.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8*(Oxford Univ., 1998).

2) 1981년 11월 및 12월에 1,504명을 샘플로 동아일보가 조사한 결과는 국민의 69%가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로, 3.3%만이 싫어하는 나라로 응답하였다. 또 60.6%가 미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선택했고 그 다음이 스위스와 이스라엘이었다. 동아일보 1982년 1월 13일자.

3) 김진웅, 『한국인의 반미감정』(일조각, 1992), pp.45-46에서 재인용.

4)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되는 나라’ 순위에서도 미국은 북한(45%)에 이은 제2위(26.1%)에 올랐다. 중앙일보, 2003년 9월 22일자(창간 38주년 기념 여론조사); 시사저널, 2002년 3월 7일자; 조선일보, 2002년 3월 3일자.

하는 미국인도 25%에 이르러 이집트 등과 함께 한국을 더 이상 긍정적인 국가가 아니라 중립적인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이제 한미동맹 50주년을 맞는 상황에서 한미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정립이 요구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두 나라의 관계는 전통적 시각과 방식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었고, 국가관계 방향에 대한 새로운 대안 마련이 시급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른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 기본적 저류로 형성된 반미운동과 그 결과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있다. 특히 반미운동의 문제를 주한미군의 문제로만 보는 시각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모델과 가치,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지속적 번영이라는 포괄적 관계에서 반미문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그것은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관계의 군사적 영역과 관련된 일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군사안보적 시각으로만 보고자하는 경향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파견한 나라이자 한미동맹의 당사자라는 자격을 떠나 세계 최대의 경제와 무역국가이자 세계안보질서를 만들어 가는 가장 강력한 주도 국가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에게 미국은 건국이후 가장 많은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져온 국가이자 유일한 군사적 동맹국이다. 미국은 한국 유학생이 가장 많이 나가는 나라이기도하고 한국 이민자가 가장 많이 나가있는 나라이기도 하며, 또 가장 많은 한국의 입양아를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⁵⁾ 따라서 본 연구는 역사 관계로 보거나,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나타난 구체적 관계로 보거나 가장 밀접하고도 우호적이어야 할 한미관계가 실제로 그렇게 인식되거나 평가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문제인식에 입각하여 한국의 반미운동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반미운동 혹은 반미주의(Anti-Americanism)는 미국이라는 나라 혹은 미국적인 특성에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반대하거나 적대적인 태도와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반미운동이란 객관적 사실과 합리성에 토대를 둔 사안별 미국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넘어 미국과 관련된 일체의 것에 대한 무차별적 비판 내지 거부적 태도를 말한다.⁶⁾ 더 엄밀히 말하면 본 연구의 반미운동이란 정상적 국가관계에서 나타난 차원을 떠나 적대적 태도를 갖고 정치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조직적 차원의 운동을 말하는 것이며 특히 1980년대 이후의 시기에 집중된다.

5) 미국의 인구통계국에 따르면 미국에 입양되는 해외 입양아 20만 여명 중 대한민국 출신 입양아는 총 4만 7,555명으로 전체의 20%를 넘어 중국, 인도 등 다른 인구 대국들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6) 이장희, “반미감정의 원인과 그 해결 방안”, 『한국사회의 반미분위기와 한미동맹』(한국국방연구원, 2002), pp.20-21.

II. 미국과 한미 관계

1. 세계에서 미국

미국은 한미관계의 한 당사자이기 이전에 우리와 별도로 존재하는 독자적 위상을 갖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반미운동세력은 미국을 한미안보관계 속에서만 보는 성향을 가지며 그것도 한미관계에서 나타난 부정적 틀과 사건으로만 판단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런 인식구조는 일상적 영역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른 한국인에게 인식의 혼란과 가치충돌을 일으키게 만든다. 예를 들면 국제기구나 외교무대에 진출하여 활동하는 단체나 개인, 그리고 미국과 상품을 거래하거나 미국으로부터 기술이나 자본투자를 협력해야 하는 기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실제 미국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미국과 맞닥뜨리는 이들 경제사회 주체들의 대부분은 정치군사적 혹은 이념적으로 미국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반미운동 세력과는 인식에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다양한 기준으로 측정된다. 그 하나가 미국의 경제규모이며 현재 미국의 GNP는 약 10조 5,000억 달러에 육박한다. 이는 세계 경제의 약 32%를 차지하는 규모로서 제2위 국가인 일본 4조 달러보다 2배 이상 많고 일본을 제외한 독일, 영국 등 나머지 10대 경제강국의 총 경제규모 전체보다도 훨씬 큰 규모다. 물론 무역규모도 연 2조 5,000억 달러로 세계무역의 15% 전후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세계 1위의 경제국가다.⁷⁾

미국은 경제선진국이면서 동시에 경제성장률에 있어서도 중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를 압도한다. 미국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51%로써 제2위 일본의 1.85%나 제3위, 제4위인 독일, 영국의 2.11%, 2.29%보다 훨씬 높았다(<표 1> 참조). 이것은 미국이 향후 발전성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앞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향후 50년 내에 질적으로 미국을 압도하는 국가가 출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7) 선진 7개국(G7) 내에서의 미국 경제의 비중도 1998년 기준으로 41.9%를 차지하고 있고 점차 그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Paris: OECD, 1999);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1).; WTO, *Trade Growth Slower in 1998 After Unusually Strong Growth in 1997*(Geneva: Apr. 1999).

<표 1> 주요 국가의 GNP, 인구, 국방비 및 성장률

(단위: 억 달러, 1,000명, %)

	GNP(2000)	국방비(1999)	인구(2001)	성장률(90~99)
미 국	1,004,463	2,831	284,822	3.51
일 본	39,934	404	127,210	1.85
독 일	19,870	311	82,339	2.11
영 국	15,642	369	58,789	2.29
프랑스	14,338	379	50,912	1.90
중 국	12,371	399	1,265,830	15.19
이태리	11,860	221	57,927	1.61
캐나다	7,356	75	31,082	2.66
스페인	6,540	73	40,265	2.95
멕시코	6,369	43	99,109	3.83
한 국	4,766	121	47,343	8.11

자료: 통계청 및 국방부(국방비)

더구나 미국의 군사력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런던국제문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1999년 국방비는 2,831억 달러다. 그리고 미국이 세계 총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 34%, 1999년 36%로 중국과 러시아의 비율 3%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것이다. 그 결과 미국 국방비는 미국 GDP의 3~4%대에 불과하면서도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10대 강국 전체의 국방비보다도 많은 액수이고 제2위인 러시아의 5배이며 중국과 일본의 7배에 달하는 규모다.

미국의 군사력과 국방비도 다른 국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우세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힘은 미국이 가진 동맹국, 미국의 해외군사기지, 그리고 미국의 정보력에서 나온다. 미국은 관련국 동의를 얻어 전세계 90여개국(10명 이상 기준)에 미군을 파견하고 있고 그 숫자는 36만 9,000명에 달한다.⁸⁾ 미국은 한국, 사우디 아라비아 외에도 경제력순위 제 2~제4위 국가인 일본, 영국 및 독일과 군사적 동맹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NATO와 브라질 등 남아메리카 국가들과도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이 가진 군사 및 경제정보는 당분간 다른 나라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

8) 중앙일보, 2003. 9. 22.

은 전세계에 걸친 정보망을 구성하고 그 정보를 영국과 공유하면서 다른 동맹국에 필요 정보를 제공하며 세계체제를 만들고 변화시키는데 활용하는 초강력국(Super Power)임에 틀림 없다. 미래에 미국과 대결할 수 있다는 중국조차도 전자 및 컴퓨터공학, 우주항공, 생명공학 및 통신 및 정보장비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20년 내지 50년의 기간이 지나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만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⁹⁾

미국이 건국이후 지난 200여년간 세계사에서 차지해온 역할은 다른 어느 국가도 해오지 못한 것이다. 미국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독일 등 파시즘 국가와의 대결을 승리로 이끌었고 1990년 전후로 구소련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중국이 시장경제로의 변화가 진행된 이후 전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단일지배구조는 더욱 확고해졌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고립주의 정책을 취해왔지만 제1차 및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고 냉전시대에는 대립관계에 있던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체제의 해체로 인해 미국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세계 헤게모니(Hegemony)적 지배를 가속화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었다.

세계질서가 군사력에 있어서나 경제력에 있어서나 다극체제로 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패권의 약화가 아닌 헤게모니의 지속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제시한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성공적으로 수호하고 수행했다는 관성이 탈냉전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¹⁰⁾ 그렇다고 미국의 지배가 항구적인 것도 모두 긍정적인 것도 아니다.¹¹⁾ 그러나 무엇보다 미국이 갖는 영향력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인류가 축적해온 보편적 가치에 상대적으로 충실했고 이를 전 세계에 확산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 어느 특정국가도 선과 정의를 독점하거나 불명예스런 역사와 과거를 갖지 않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미국이 대규모 전쟁을 통해 굴복시켰던 나치즘적 독일 및 파시즘적 일본과의 전쟁, 그리고 공산주의국가였던 소련과 중국에 대항하여 봉쇄정책과 공산전체주의의 해체로 이끈 것은 세계사적 업적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에 미국의 힘은 단지 군사력이 크고 경제력이 크다는 것으로부터만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잘못된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로 보편적 가치에 반했다면 강고한 반미국 연맹의 출현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를 조셉 나이(Nye)는 미국은 단지 정치적, 군사적 힘과 같은 경성 국력만을 갖춘 것이 아니라 세계를 주도하는 제도, 이념, 문화와 같은 연성 국력(soft power)까지 갖춘 국가임을 강조한 바 있다.¹²⁾ 그것은 세계 기축통화로 위상을 갖는 달

9) R. Cliff, *The Military Potential of China's Commercial Technology*(CA : RAND).

10) 정형석, "미국 패권지속 경향에 관한 실증 고찰", 『한국과 국제정치』(제17권 제2호, 통권 제35호, 2001), pp.64-65.

11)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는 S. P. Huntington, "The Lonely Superpower: U.S. Military and Cultural Hegemony resented by Other Powers," *Foreign Affairs*, Vol.78, No.2(Mar. 1999); G. J. Ikenberry, "Liberal hegemony and the future of American postwar order," in T.V. Paul and John Hall, (ed.), *International Order and the Future of World Politics*(New York: 1999); W.C. Wohlforth, "The Stability of a Unipolar World," *International Security*, Vol.24, No.1(summer, 1999) 참고.

러화, 그리고 UN의 각종 기구뿐만 아니라 IMF나 WTO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주도적 위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달러(Dollar)는 1998년 기준으로 세계 총 외환시장 통화거래의 43.5%를 차지하여 엔(Yen) 10.5% 등 다른 통화를 압도하고 세계 증권시장의 절반 이상이 달러화로 발행되고 있다는 것 등이 미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들이다.¹³⁾

2. 한미관계의 성격

미국이 갖는 객관적인 세계적 위상을 별도로 하더라도 적어도 대한민국의 건국이후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더 없는 특수관계인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비록 동아시아의 세력관계를 인정하며 중국, 러시아 등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일본의 한국통치를 승인하였지만 그후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이 확대되자 카이로(Cairo)선언, 포츠담(Potsdam)선언 등에서 보듯 일본의 식민지적 한국통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있도록 추진해온 주도국가였다.

그후 미국은 공산주의의 확장을 막는 주도국가였고 특히 1950년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북한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이를 저지한 주도국가였다. 그에 따라 전쟁 중 총 3만 8천명에 달하는 미군이 사망내지 실종되었고 중부상을 포함하면 희생자는 모두 13만 6,000여명에 이르렀다.¹⁴⁾ 이 같은 희생 숫자는 전체 참전 16개국의 전사 및 희생자 수 15만 2,000명 중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91%에 달하는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미국은 유일한 전투사단인 제2사단 및 제7사단 등을 한국에 주둔시키며 전후 한국의 안보와 대북 억제력을 담당할 유일한 국가였다.

또한 미국은 적어도 1970년대에 들어서기 전까지 대한민국 전후 복구와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실질적으로 원조가 계속된 1971년까지 미국의 대 한국 경제원조는 약 57억 달러였고 같은 기간 군사원조 68억 달러까지 합치면 총 원조규모는 126억 달러에 달한다.¹⁵⁾ 특히 미국의 경제원조는 우리 한국이 가장 어려웠던 전쟁 후 1950년대 중·후반에 가장 많은 양이 지원되었는데 1955년부터 1960년까지 6년간 평균 연간원조액은 2억 8,000만 달러로 당시 한국 국민총생산(GNP)의 6.8%에서부터 10.4%에 달했고 평균 8.8% 수준에 이르는 규모였다.¹⁶⁾

12) J. Nye,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New York: Basic Books, 1990).

13)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ank Survey of Foreign Exchange and Derivatives Market Activity*(Apr. 1998); BIS, 69th Annual Report (Basle: Jun. 1999).

14) Robert Leckie, *Conflict: The History of the Korean War*, (Da Capo Press : New York, 1996).

15) 김수근, 『한국의 경제발전과 미국의 역할』, 김덕중 편, 『한국과 미국(2) : 경제관계』(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8). 이와 같은 미국의 대한 원조는 1948년의 경제협력법(Economic Cooperation Act) 및 1961년의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에 따른 것이다.

16) Anne O. Krueger, *The Developmental Role of the Foreign Sector and Aid*(Cambridge: Harvard Univ. 1979).

특히 미국은 직접적 경제원조 시대를 끝내고 차관 내지 직접투자가 주도하던 시대에도 가장 큰 차관 및 투자주도국이였다. 1959-1971년까지 미국은 전체 공공차관의 61.7%, 상업차관의 33.6%, 그리고 외국인 직접투자의 64.7%를 점하였다. 마찬가지로 무역에 있어서도 1960, 70년대에 한국의 수출액 중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대였으며 1960년대 후반에는 절반을 넘어 52%에 달하기도 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흑자 대상국이었다.¹⁷⁾

그에 따라 한국은 1980년 중반에 이르면 프랑스, 이탈리아 등을 제치고 미국의 제7대 무역국가의 위치에 오르고 미국에서 흑자를 많이 남기는 제5위국에 오른다.¹⁸⁾ 이것은 우리가 흔히 수출로 성공한 나라라는 의미에서 수출입국(輸出立國)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 수출의 절반은 단 한 나라인 미국을 대상으로 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특정 국가가 어느 방향을 지향하고, 어느 국가모델을 선택하고 있는지는 그 나라 유학생과 이민자의 국가 선택 숫자로도 알 수 있다. 한국의 대외 유학생은 거의 대부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다. 이는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반미운동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삶의 형태에 있어서는 미국이 가진 다양한 선진성을 습득하고 배우려는 결과다. 또한 미국은 한국인에게 캐나다와 함께 가장 이민 가고 싶은 나라중의 하나고 실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민 가는 나라다. 최근에도 매년 6,000명을 전후한 이민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까지 약 200만에 가까운 한국인이 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¹⁹⁾ 그리고 자녀를 미국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는 소위 ‘원정출산’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된 상태이며, 그 숫자는 2002년 기준으로 5,000명에 달하고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⁰⁾

미래를 선택하는 유학생이나 살던 사회를 떠나 다른 사회를 선택하는 이민자가 향하는 사회는 그 사회가 갖지 못한 더 많은 것을 가진 사회임이 틀림없다. 그렇기에 정치·안보적인 것을 떠나 경제·사회적 현상인 교류, 이민, 유학 등 공동체의 보편적 삶의 형태는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시되고 있다. 일상적인 한국인에게 미국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외국이고 받아들여야 할 많은 제도와 가치를 축적시킨 사회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이나 한국인에게나 한미관계는 적어도 대한민국 건국이후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資産)중 하나임에 틀림없었다.

17)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968년 기준으로 총 2억 3,700만 달러를 수출하여 전체 수출의 52.0%가 대미 수출비중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1985년에는 대미수출이 107억 달러에 달했고 전체 수출 중 대미수출 비중은 36%로 줄어들게 된다. 김수근, 앞의 글, pp.41-49 에서 재인용.

18) 김우택, 『한-미 무역관계의 장래-채무국으로서의 미국의 통상정책과 세계시장질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김덕중 편, Ibid, p.163; 김수근, Ibid, p.47에서 재인용.

19) 반미운동적 논리를 보급하는 비판적 지식인들의 자녀들 중 대부분도 미국 유학을 했거나 유학중에 있다. 한편 한국전람에 따르면 캐나다와 함께 미국은 한국인이 이민 가고 싶어하는 최대 대상국이다. 중앙일보, 2003. 9. 16.; 통계청, 연도별국가별 이민자 수.

20) 중앙일보, 2003년 9월 20일자 보도 참고.

그러나 그런 사회에서 펼쳐지는 반미운동은 대단한 역설(逆說)이자 정상적으로 해석되기 어려운 현상이다. 실제 건전한 미국비판을 떠난 우리 사회의 반미운동은 대한민국이 가진 최대 자산을 붕괴시키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미주의는 정상적인 삶의 과정에서 내면화되고 형성된 것이라기보다 현실과 분리된 목적의식적인 정치 이데올로기적 집단에 의한 반미운동의 결과가 과도하게 증폭된 결과라고 해석된다. 마치 레닌주의로 무장한 소수 볼셰비키세력이 러시아를 공산주의혁명으로 이끌고 소수 모택동 공산주의세력이 중국을 공산화하는데 성공하였듯이 우리 사회에서 반미운동은 특정 사회상(像)을 목표로 한 세력의 목적의식적 정치투쟁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III. 반미운동의 기원과 확산 원인

우리 사회에 급격히 대두된 반미운동은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되나²¹⁾ 한국 반미운동의 근원은 전적으로 북한이 공산주의체제를 존속시키면서 상대방인 대한민국의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공세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한국의 반미감정이 마치 전후세대의 등장이라는 인구구성의 변화나 미군에 의한 범죄사건 등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²²⁾

왜냐하면 한국의 반미감정은 인구구성이 변화하는 다른 국가나, 유사한 SOFA협정을 맺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 나타나는 반미감정보다는 더 광범위하고 격렬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반미정서를 한미간 국가갈등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추동하고 친북 운동세력이 확장시킨 반미운동의 결과라는 사실을 오도할 위험이 있고, 한국사회 반미운동의 격렬성이나 광범위성을 한미간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온 북한 전략을 도외시하고 북한의 의도에 부응하는 결과로 가게 된다.

한미간의 무역갈등이나 미군의 범죄사건, 혹은 SOFA협정 문제 등은 모두 정상적 국가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 자체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정상적인 미국 비판이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문제와 관련된 비판과 해결에 치중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반미운동은 다른 국가에서 나타나는 반미와 차원을 달리한다. 미국의 모든 정책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미군 관련 사건을 의도적 살인이나 학살로 몰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수업으로부터, 일부 환경운동, 민주화운동, 그리고 인권운동에 이르기까지 그 목표를 전반적 반미감정의 고조와 확산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반미운동의 기원은 북한에서 펼쳐는 체제대결과 대한민국 체제 붕괴전략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외 다른 요소는 반미운동전략이 확산될 수 있는 여건에 불과한 것일 뿐이라는 것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1. 북한 반미전략과 친북좌파의 연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은 현재 대한민국과 함께 한반도 전체의 주권을 배타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을 미국 제국주의의 식민지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남한의 정

21) John K. Oh, "Anti-Americanism and Anti-Authoritarian Politics in Korea," Kim Ilpyong(ed.) Two Koreas in Transition: Implications for U.S. Policy(Paragon House, 1998); Kim Jin Wung, "The Nature of South Korean Anti-Americanism," *Korean Journal*(1994).

22) 많은 학자와 여론기관은 반미감정의 악화가 전후세대의 등장이거나 한미간에 발생된 잘못된 문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북한의 전략과 집요한 공세, 그리고 이에 부응하는 한국의 반미운동세력의 활동에 따른 산물임을 밝히지 않는다. 예를 들면 Kim Seung-Hwan, "Anti-Americanism in Korea," *The Washington Quarterly*(Winter, 2002)의 논문은 부시(Bush)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반미의 원인이 될 수 없음을 비판하면서도 한국의 인구구성 변화를 반미감정 확산의 가장 큰 변수로 본다.

부를 미국의 괴뢰정부이자 종속국으로 규정한 북한은 스스로의 존재를 미국에 대항하여 남한을 해방시켜야할 주체로 자부한다. 그렇기에 북한은 한국정부와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미국과 대결하여 한국을 해방시키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완수해야할 궁극적 혁명목표다. 김일성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남조선은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남조선 집권자는 미국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하수인”이라고 밝혀왔다.²³⁾

“미제국주의가 우리나라의 절반인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있다”는 전제에 따른 북한 체제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통일시키는 것이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오직 미국을 몰아낼 때만 가능하다는 전제(前提)하에 모든 전략과 전술을 집중시켜왔다. 북한은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그 침략전쟁은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의 화근이고 우리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는 기본장애”로 보고 그 기본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투쟁과 평화협정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다.²⁴⁾

북한은 1990년초 구 소련과 동구의 해체가 있기 전까지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옹호와 제국주의로부터의 민족해방 논리에 입각한 전략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시장경제의 길을 가고 구 소련은 공산주의체제를 해체하고 자본주의적 개혁·개방을 하게되자 북한은 친사회주의와 반제국주의라는 논리가 더 이상 그 효용성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느끼고 초대형의 단군(檀君)릉을 건축하는 등 ‘민족(民族)’을 활용한 전략에 집중해왔다. 한국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끼어들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성장한 반미주의는 1980년대 미국을 목표로 한 ‘반제국주의’와 허구적 ‘민족주의’에서 시작된 것이다.

북한은 광주에서의 민주화운동을 반미운동 확산과 체제전복의 계기로 만들고자하는 의도를 가지고 단파방송, 친북단체 등을 통해 학생운동권에 미국이 광주사태를 주도했고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확산시켰다. 그 결과 발생한 것이 광주 미문화원 방화사건(1980),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1982) 그리고 서울 미문화원 점거사건(1985)이었다. 그들의 구호는 “광주사태 책임지고 미국은 사과하라”는 것이었다.²⁵⁾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반미를 외치는 분신자살이 유난히 많았고 심했다. 김세진 등 서울대생의 분신자살이나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철의 분신에 이은 전남대생 박승희 분신사건(1991)은 시위와 분신의 최대 목표가 반미 혹은 미제국주의 타도에 있었다. 박승희는 유서에 “제 길이 2만 학우 한 명 한 명에게 반미의식을 심어주고 정권타도에 함께 힘썼으면 하는 마음에 과감히 떠납니다”라고 미국에 대한 적개심과 반미운동의 고양을 요구하고 있었다.²⁶⁾

23)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4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김일성저작집 2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24) 『현대조선역사』(김한길,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83)을 1988년 일송정에서 재출간.

25)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을 풀며 배포한 성명서에서 학생들은 “미국은 광주학살을 지원했던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해명할 것과 한국민 앞에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26) 박승희는 나아가 강경대의 “죽음에 약간의 슬픔과 연민을 가지다가 다시 제자리로 안주해 커피를 마시고 콜라를 마시는 2만 학우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분신하게 되었다고 유서에서 적고 있다. 강정인, “정치·죽음·진실: 1991

이와 같은 학생운동권의 선도적이고 극한적인 반미운동은 많은 정상적인 좌파 학생과 지식인들에게조차 민주화운동이란 결국 미국에 대한 반대운동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곧 민족자주화운동이라는 인식과 행동으로 몰아갔다. 급기야 1986년 인천 대중집회에서는 “광주학살 사주한 미국을 몰아내자”, 그리고 “친미로 망한 나라, 반미로 되살리자”가 중심적 구호가 되었고 이제 한국에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한 것이 미국의 책임이며 향후 한국 민주화는 오직 반미로써만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를 확대시켜왔다.²⁷⁾

그 과정에서 북한은 반미운동의 지원에 필요한 각종 전략과 논리의 공급자적 역할을 해왔다.²⁸⁾ 한국에서 펼쳐지는 반정부 혹은 반미시위의 일부세력은 북한의 투쟁지침에 따라 자기 논리를 만들거나 바꿔왔다. 그 결과 한국의 운동권에서는 더 이상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변혁’ 혹은 ‘혁명’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자주’, ‘주체’, ‘민족’ 혹은 ‘민족 공조’ 등의 용어를 활용한 전략에 치중하였다. 특히 단군릉을 대대적으로 조성하며 활용하기 시작한 민족과 반민족 혹은 반제국주의 개념은 한국에서의 반미운동을 격화시키는데 활용하였다. 그것은 체제로서의 공산주의의 멸망이라는 위기를 오히려 ‘민족’이란 개념으로 전화시켜 기회로 바꾼 것이었고 그 효과는 더욱 발휘되었다.

한국의 반미주의 운동세력은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공급하는 반미논리를 반복한다. 그 한 예로 1990년대 초 북한이 한반도 반핵(反核) 및 비핵화(非核化) 전략을 내세우자 이에 따라 대대적인 반핵 투쟁을 전개하였지만 1993년 이후의 북한 핵개발에 따른 위기나 2002년 이후의 북한 핵무기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반핵 내지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오직 미국을 전쟁주의자로 몰면서 반전(反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²⁹⁾

북한은 1990년대 초 독일이 통일에 이르자 남북협력과 통일이 안되는 이유로 군사분계선(DMZ)을 따라 북한의 남침저지, 특히 한국전쟁의 경험에 따라 탱크저지를 위해 만든 콘크리트 장벽 때문이라며 이를 철거하라고 하자, 그 이후부터 한국의 시위대는 지속적으로 “콘크리트장벽 철폐”운동이 펼쳐지기도 했다. 또 2002년 미국 유타 동계올림픽에서 안톤 오노(Anton Ono)의 과잉 제스처가 심판에게 받아들여져 김동성이 금메달을 받지 못한 사건은 국민감정상 충분히 억울해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상 그 책임은 오노선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결정을 내린 오스트레일리아인 심판장에게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미

년 5월 투쟁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6집 3호(2002 가을, 한국정치학회)에서 재인용.

27) 김진웅은 1986년 5월의 반미구호가 비로소 대중의 집회에서 최초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반정부세력이 스스로를 반제국주의자이자 반체제운동임을 밝힌 것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p.107.

28) 김진웅, 『한국인의 반미감정』(일조각, 1992), p.63.

29) 한국전쟁 발발 40주년을 맞아 한반도 군축과 평화 통일을 촉구하는 302명의 진보인사의 선언문(1990. 6. 16)을 보거나 전국민족민주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중당 등의 성명서(1991. 9. 26)를 보면 한반도에서의 ‘비핵’ ‘군축’을 주장하고 한국정부가 평화실현을 위해 ‘핵무기 철수’와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실천하라는 것이 주된 한반도 평화정착의 논리였다.

운동 세력들은 그 사건을 미국에 대한 반감을 확대하는 데로 몰아갔다. 더구나 당시 중국 선수는 한국선수의 무릎을 고의적으로 잡아채 넘어지게 한 사건을 저질렀음에도 중국에 대한 비판이나 반중(反中)감정이 나타난 적은 없었다.

이 같은 예에서 보듯 한국 반미운동세력의 미국에 대한 태도나 비판은 전적으로 반미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정치이데올로기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받아들여지기 힘든 각종 역설(逆說)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친북적 반미운동세력의 각종 정치투쟁 때문이다. 실제 1980년대 학생운동권을 이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그 강령 제1조를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부당한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의 지배와 간섭을 막아내고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를 실현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반미를 운동의 주요 전략으로 삼던 세력들이 이제 대한민국 사회의 주도적 위치로 등장하였다.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의 실례 중의 하나가 2002년 미군에 의한 여중생 희생사건이다.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의 희생은 우발적 사고(accidents)에 의한 것이었지만 거의 동시에 발생한 인도네시아 발리(Bali)테러 사건에서 한국인 두 자매의 희생은 테러세력에 의한 명백한 고의적 살인이었다. 그러나 어느 단체나 언론도 발리의 두 자매 희생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나 성명 혹은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았다. 여중생 희생사건만이 크게 부각된 것은 이 사건이 미국과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반미운동세력이 의도적으로 벌인 과도한 문제제기와 투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건, 예를 들면 중국어선 수백척의 불법조업이나 마늘파동, 혹은 납덩이가 들어간 생선수입 사건 등 뿐만 아니라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가하여 한국군과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 등에 대해서는 중국을 대상으로 그 어떤 규명이나 책임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반미운동이 보편성과 균형성을 유지한 시민사회운동이 아니라 미국을 부정하고 미군을 철수시킬 것을 목표로 한 반미운동이기 때문이다.

친북적 반미운동 세력은 민주화운동이란 외피를 두르고 실제로는 반미주의의 고양에 투쟁의 목표를 설정해왔다. 2002년 미국의 부시(Bush) 방한시에는 시민단체 603개가 연대하여 ‘전세계 악의 근원’ 부시반대 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집권하게 된 김영삼정부와 김대중정부를 통해 반미운동 세력은 정부의 요직과 언론기관, 그리고 국회 구성원의 일부를 점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정부에 들어와 반미주의세력은 본격적으로 국가 공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사회의 중심세력으로 성장하여 반미적 논리가 보편적 논리로 받아들여지고 국가정책으로 집행되는 상황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2. 냉전해소와 중국의 성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던 공산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간의 체제대결은 한국사회에서도 공산주의 북한을 적대시하고 자유 시장경제를 지원하는 미국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당연하게 만들어왔다. 그러나 구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했던 공산주의체제가 해체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이상 미국의 절대적 중요성은 축소되었고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도 함께 약화되었다. 특히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전쟁 당사국이자 적대적 위협국이었고 중국과 러시아는 공산주의체제였고 북한을 지원하여 전쟁을 주도한 당사국이었다. 마지막 남은 일본은 한국을 점령하고 식민지정착을 폈다가 이제 물러간 나라다. 해방 후, 그리고 전쟁을 겪으면서 한국은 공산주의 국가와 과거 식민지배국에 둘러싸인 ‘섬나라’나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건국이후 한국인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섬나라’가 아니었다. 러시아 및 중국과 잇단 수교를 맺었고 이미 그 이전인 1965년 일본과 수교를 맺어 이제 북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적인 관계에 돌입하였다. 냉전체제의 해소와 함께 중국의 비약적 성장은 한국인에게 새로운 국제관계와 세계관을 형성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오랜 역사적, 정서적 유대를 맺고 있던 중국과의 관계 강화는 한국인의 대미인식에 대한 피난처를 제공하였다. 대미 감정이 나쁘면 나빠질수록 중국에 대한 정서가 우호적으로 바뀌는 상관관계를 보이게 된 것이다.

한국인은 주변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대외적 연대나 동맹을 고려하는 사고를 갖는다. 따라서 만약 한국인이 미국에 반미 내지 대립적 감정을 키우는 과정이 대외적 고립감을 유발시켰다면 한국에서의 반미운동은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화와 경제성장은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우호국가로 등장하면서 반미인식을 증폭시킬 수 있는 잠재적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 중국은 1978년의 개혁개방정책이후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에서 경제교류와 인사교류에 있어 한국에게 미국을 대체하는 나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과의 정식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만 해도 대중국 무역규모는 60억 달러로 미국 360억 달러의 6분의 1에 불과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2002년의 대중 총무역량은 411억 달러에 이르러 대미 무역량 558억 달러에 근접하고 있다(〈표 2〉 참조). 이와 같은 무역량은 일본과의 무역량 450억 달러와 차이가 없는 규모에 이르렀다. 이제 국회의원이 TV토론에 나와 경제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국과 미국이 차이가 없으며 미국과의 동맹을 중국과의 동맹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주장이 커다란 사회적 반향도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만큼 중국에 대한 인식이 미국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표 2> 한국의 대미 및 대중 무역규모

(단위: 100만 달러)

년도	1992	1995	1998	2002
한국 대 미국	36,377	54,535	43,208	55,789(17.7%)
한국 대 중국	6,379	16,545	18,428	41,154(13.1%)

자료: 한국무역협회(통관기준, 괄호는 총무역량 비중)

한-중관계의 변화에 따른 현상은 각종 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세력을 주시해야 한다(25.9%)기 보다는 절대 다수가 중국 중심의 대륙세력을 중시해야 한다(55.5%)로 조사된 바 있다. 미국 포토맥학회(Potomac Associations)가 한국의 갤럽(Gallup)과 공동 수행한 한국의 각계에서 추천된 차세대 지도자(51명)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가 호감도에 있어서 중국(53%)과 미국(59%) 양국의 호감도에서 큰 차이가 없었고 향후 미래관계를 보면 86%가 중국과의 관계가 보다 밀접해질 것이라고 한 반면 불과 14%만이 미국과 더 밀접해질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³⁰⁾

그러나 우리의 친중국 태도는 중국의 대북관계와 비교하여 보면 아직 우리의 일방적 ‘짜사랑’ 수준인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국가기관인 중국사회조사소(SSIC)가 한중수교 11주년을 맞아 지난 6월 9일 조사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제2차 한국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 인민은 중국정부가 제2차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찬성하는 비율이 57%에 달했고 반대는 불과 19%에 불과했다. 더구나 중국인들은 북한이 추진하는 핵무기개발에 대해서도 54%가 찬성하였고 반대는 30%에 그쳤다.³¹⁾

그렇지만 한국의 운동권, 특히 반미적 논리를 갖는 세력이나 세대에게는 중국에 대한 막연한 호감과 일방적 태도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된 이후 많은 수입규제나 불법어로 등 많은 갈등이 발생하였고 망명을 원하는 탈북 북한주민을 강제적으로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지만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발생했던 적은 없다. 일부 운동권에서는 미얀마, 동티모르 등 주변 아시아 각국의 인권 문제나 민주주의의 제한에 대해서는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나 중국에서 민주주의적 선거가 없고 일당독재(一黨獨裁)체제가 유지되는 사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시위를 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것은 북한과 함께 중국이 반미주의를 기본 노선으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의 반미

30) 여론조사(1,002명, 월간조선, 2002년 4월 9일 ~ 10일); “한국 차세대 지도자 대상 미국 포토맥학회 여론조사 보고서”, 『월간조선』(2002년 5월호).

31)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劉建超)은 여론조사 결과는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중국정부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표명하였다. 중앙일보, 2003. 6. 18자.

운동권에게는 늘 예외적 대상이자 동지적 연대의식을 갖도록 만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반미운동의 중심세력이 형성되기 시작하던 1980년대 중국과 북한이 모두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사회주의’는 가야할 방향이었고 건드릴서는 안되는 ‘성역(聖域)’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정국가에 무비판적인 또 다른 의미의 사대주의적 사고이나 중국에 관한 한 사대주의라고 여기지 않는 특징을 강하게 갖는다.

이처럼 반미운동에 따른 사회분위기 속에 과거 미국의 역할은 적어도 심리적 차원에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고 있으며 각종 여론조사가 이를 잘 보여준다. 한국인의 절반에 이르는 49.8%가 한미동맹이 약화될 때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할 나라로 중국을 선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북한-미국-일본에 이어 불과 9.5%만이 한국에 위협적인 나라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형편이다.³²⁾ 그 결과 중국은 한국의 국력 자체 보다도 한국이 미국의 튼튼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우리를 중시여기고 대우하고 있음에도 마치 우리가 미국과 동맹 관계를 버리면 중국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의식이 확산되기에 이른 것이다.³³⁾

3. 성장에 따른 자부심과 ‘햇볕’정책

한국의 반미감정에는 약소국이라는 잠재의식에 따라 형성된 약자가 강자에게 도전하는 “짜릿함(exciting)”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³⁴⁾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반미운동은 경제성장에 따라 세계 12위의 경제국가이자 국민소득 1만 달러에 이른 자부심을 반영하고 있다. 오랜 기간 어렵고 약소국적 위치에 있던 한국인은 약소국이나 추종자(follower)가 강대국 혹은 리더(leader)에 대항하는 것에서 느끼는 일종의 쾌감을 느끼는 것이다. 즉, 한국 반미운동의 고조와 쇠퇴는 한국인의 성취감이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에 따라 상관관계를 갖고 움직이는 것에서 볼 수 있다.

한국인에게 경제적 혹은 대외적 성취가 있었을 때 반미의식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1980년대 중반이후 한국이 확고한 중진국 위치에 접어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미국에 대한 반발의식은 급격히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예가 1988년의 올림픽이었고 2002년의 월드컵이었다. 서울올림픽 이후의 여론조사는 반미감정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올림픽 이전에는 가장 좋아하는 세 나라중의 하나로 56%가 미국을 선택한 반면 올림픽이후에는 그 비율이 40%로 떨어졌고 반면에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의 비율은 16%에서 38%로 급격히 상승했다.³⁵⁾ 올림픽과정에서 미국선수단의 무례한 행동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경제성

32) 중앙일보, 2003년 9월 22일자.

33) 차영구(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북핵문제의 전망과 대책』, 한국발전연구원 강연회(2003. 6. 19).

34) David Steinberg는 한국인의 반미감정이 짜릿한(exciting) 경험으로 생각한다는 평가가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The Heritage Foundation Seminar July, 25, 2003.

35) KBS 여론조사, 조선일보 1988년 10월 28일자 보도.

장과 세계적 올림픽의 성공이 미국에 대한 반감이 강화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1986년부터 1990년 사이에 한국의 반미운동이 가장 활발했다.

서울올림픽에서 보였던 반미적 분위기는 2002년 월드컵과 그 이후에도 뚜렷이 나타났다. 한국전쟁후 두 번째였던 1998년의 마이너스 성장을 딛고 2000년과 2001년의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성장과 2002년 월드컵에서의 4강 달성은 우리 국민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커다란 자부심을 이끌면서 다른 한편에선 미국에 대한 저항의식을 촉발시켰다. 특히 미국과의 경기 중 한국선수가 골을 넣고 나서 미국인 오노(Ono)사건을 흥내낸 골 세레모니나 월드컵이후 전 한국사회를 소용돌이로 몰아간 두 여중생 사망사건에 따른 시위집회는 상당부분 국민들이 느끼는 성취감과 미국에 대한 한국의 자신감이라는 토양과 결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인에게 어려움이 가중되었을 때나 성취의식이 미약할 때는 반미의식이 상대적으로 위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1980년대 중반이후 확대 일로에 있던 부정적 대미인식의 확산이 가장 작았을 때는 외환위기에 따른 IMF 구제금융을 받던 시기다. 비록 그 당시에 IMF 구제금융의 지원조건이 한국경제를 종속화시키고 굴욕적으로 만든다는 논리가 있었고 미국의 투기성 자금이 외환위기를 만든 원인이라는 논리도 많아 운동전략에 따라서는 오히려 반미운동이 더 격화될 수 있는 여건에 있었지만 반미운동은 상대적으로 매우 위축되었다.

한국의 성장과 함께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은 북한체제에 대한 근거없는 우호적 태도와 미국에 대한 근거없는 적대적 태도를 가중시켰다. 물론 햇볕정책 그 자체의 목적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북한이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은 곧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고자 했던 한미동맹의 존재를 흔드는 것이었다. 실제 사실과도 다르게 북한의 위협이 없다는 정부의 급격한 정책전환은 동맹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나아가 동맹 무용론을 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의 ‘햇볕’정책은 기존의 대북한 국민 인식을 정부주도로 바꾼 커다란 사건이다.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도 취임사에서 ‘동맹보다 민족이 중요하다’라거나 미전향 장기수인 이인모를 북한에 보내주는 등 북한에 대한 호의적 태도로의 변화가 없지는 않았지만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대북 인식의 변화를 만든 것은 2000년 이후의 김대중 정부에서였다. 김대중 정부는 우선 사교(邪敎)와 같은 주체사상의 수령인 김정일을 “예리하고 감수성이 매우 강한 인물”이라거나 “예의바르고 지적 능력을 갖추고 판단력이 예민하며, 대화가 되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극찬하였다. 나아가 “북한 지도자 가운데 밝을 가장 잘 알고 가장 개혁을 하려는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식으로 발언하여 북한 개혁의 주도자 반열에까지 올려놓았다.³⁶⁾

그 결과 각종 반미적 단체의 사이트에는 미국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북한이 선전적 차원에서 공급하는 자료들이 무차별적으로 올라와 있으며 그 내용도 “김정일 장군님을 통일 대통령으로”라든지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 합쳐나가자” 등의 김정일에 대한 찬양과 반미주의를 고취시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³⁷⁾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적대국가의 최고지도자이자 가장 반민족적인 인사인 김정일을 미화하였으며, 그 어느 국가나 어느 역사에도 없던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선언을 하기에까지 이르렀다.

북한은 중국과 미국, 인도에 이은 전세계에서 4번째 많은 약 120만에 가까운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핵무기를 만들고 대륙간 탄도탄을 만들어 실험하며 북한 스스로가 강성대국(強性大國)과 선군정치(先軍政治)를 내세우며 국방위원장(김정일)이 국가최고 통치자인 병영국가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가능성이 없는 국가인 것처럼 만든 것은 전적으로 햇볕정책의 영향이다. 남북 정상회담 후인 2000년 9월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90%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거나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히고 있고 국회의원부터 나서서 미국 “부시정권은 도덕적 파탄상태에 있고 쓰러져 가고 있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북한이 위협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미국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의식을 형성시키는 근거가 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그에 따라 좌파 반미운동 세력은 일제히 공공연한 친북 활동에 나섰으며 6·15정상회담 1주년인 2001년 한총련은 연세대 정문에 북한의 인공기를 게양하기도 했다. 이제 미국은 마치 통일을 눈앞에 둔 우리 민족의 통일과업을 방해하고 북한 경계론을 부추기며 남북간의 평화기조를 뒤흔들려고 하는 반평화, 전쟁주의자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그리고 반미운동 세력은 미국이 전쟁을 막는 제도적 장치인 평화협정을 거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전쟁위협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에 의해 저질러져 왔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북한이 걸어온 민족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역사 행로는 남한 386세대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민족 자긍심을 고취시켜 자주권을 중심으로 주한미군 문제를 접근하도록 했다고 평가한다.³⁸⁾ 이처럼 반미운동은 미국에 대한 문제제기이지만 실제로는 북한이 한국사

36) 영국 The Financial Times와의 회견문(Jul. 1st, 2000) 및 광복회원과의 오찬(2000년 8월 16일)과 대한민국 학술회원 및 학계인사와의 오찬(2000년 8월 17일) 발언, 『월간조선』(2002년 2월호), p.103. 참조.

37) 그와 같은 예는 전국연합(www.nadrk.org) 등이 대표적이다. 그외 반미적 경향의 사이트로는 www.peacekorea.org, www.usacrime.or.kr, www.one-korea.net, www.jatong.org, www.ohmynews.co.kr, sofa.jinbo.net, www.s-park946.org 등이 있다.

38) 강정구, 『한미관계와 반미감정, 미국은 우리에게 있어 어떤 나라인가?-반미, 친미감정을 중심으로-』, 경실련 통일협회 토론회(2000. 8. 29). 기타 북한의 대남정책과 논리와 관련해서는 전현준, 『북한의 대남정책 특징』(통일연구원, 2002) 참조.

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대한 확대 제고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북한의 위상과 위협에 따른 영향력을 강화시키게 만들어 온 것이다.

IV. 반미운동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1. 안보(security)취약에 따른 사회 불안정

어느 국가의 역사에서나 취약한 안보(security)는 국가발전의 최대 장애요인이다. 안보가 취약한 나라에서 문명이 흥하고 번영이 지속된 예를 찾기 어렵다. 한국은 상당한 기간의 역사에서 중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안보취약 상태를 유지해왔다. 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이며 바다 건너로는 일본인데 이들 국가 모두 영토의 크기로 보거나 인구수로 보거나 모두 한국보다는 월등히 크고 많다. 그렇기에 한국은 주어진 역사적 조건 속에서 다른 국가와의 연대관계를 통해 독립과 안보를 지원받아 왔다.

대외지원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전통적 안보전략은 주변국의 역학관계에 따라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과정을 밟아왔다. 지난 500년간 한국은 네 번에 걸쳐 주변국으로부터 침략과 전쟁을 겪었는데 네 번 모두 한국은 일방적 피해당사자였고 국토와 국민의 유린이라는 희생을 입었다(〈표 3〉 참조). 임진왜란(1592)이나 병자호란(1636)은 모두 파죽지세로 밀리며 저항다운 저항조차 없었고 당시 부산과 의주로부터 서울까지 당시 도보로 10일 이상 걸리는 거리에 있음에도 전쟁발발 불과 13일과 19일만에 서울이 점령된 것에서 보듯 단 몇 일간의 대치나 전투다운 전투조차 없던 일방적 전쟁이었다.

<표 3> 한국이 당한 주요 침략 비교

침략시기	침략국	수도붕괴시기	결과	한국지원국가
1592	일본	19일	국토유린/휴전	중국(明)
1636	중국(청)	13일	국토유린/항복	-
1910	일본	-	주권상실 합병/항복	-
1950	북한	3일	국토유린/휴전	미국/UN

그것은 우리가 국방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스스로를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록 주변의 국경을 마주하는 국가들이 중국, 일본 혹은 러시아라는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대비도 없이 자신을 안보적 취약상태에 방치시켜놓고 사는데 익숙해 온 것이다. 명(明)나라가 파병하여 도와준 임진왜란은 7년간의 전투 끝에 일본을 몰아낼 수 있었지만 명의 도움이 없었던 병자호란은 치욕적 항복으로 끝났다. 그 후에도 청나라에

의존하던 우리는 일본이 청을 압도할 만큼 성장하자 제대로 된 전투 한번 없이 주권을 내주고 식민지의 길을 가야했다.

한국전쟁(1950)도 우리 스스로가 안보를 포기한 결과다. 당시 건국 후 대한민국은 자기 안보를 책임지지 않는 과거 역사를 반복했고 결국 건국 3년만에 공산주의국가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침략으로 또 다시 단 3일만에 수도 서울을 포기하고 부산으로 밀려가야 했다. 그 결과 3년에 걸쳐 300만 명이 희생을 입는 세계 제12위 대전쟁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으며 그것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UN)의 도움으로 겨우 독립과 국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³⁹⁾

한국전쟁 이후 그런 고립된 섬나라이자 주변국 모두 적대적이고 비우호적인 상황에서 우리 민족 전역사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상황적 안보취약을 극복하는 국민적 결의와 대비가 있었고 미국의 지원과 주둔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연대 및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은 안보적 위협이 가장 불안한 한국이 가장 확고한 안전보장 장치를 갖추게 되고 안전(security)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했다.

2,000만 명이 집중된 수도권 40여km 전방에 우리 국가체제를 붕괴하고자 하는 세력이 존재하며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군사 도발을 자행하며 세계 4위인 120만의 대군을 집결시킨 상황에서 미국과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이라는 침략세력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동맹이면서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 안정적으로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반미운동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는 핵무기로 무장하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파괴하는 북한보다는 오히려 미국을 대상으로 전쟁주의자이자 평화파괴자라고 공격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만들어 스스로 안보를 포기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의 주변국가는 일본을 제외하면 모두 핵보유국이거나 핵개발국이다. 특히 적대관계에 있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가장 커다란 안보상의 위협이다. 우리는 중국, 러시아 등 주변 핵강국들 뿐만 아니라 핵실험만 없었을 뿐 핵무기를 보유 내지 개발이 임박한 북한으로부터 핵위협 없는 안전국가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구나 일본도 핵개발 필요성에 따라 핵무장화에 나서면 몇 개월 내에 핵무장이 가능한 기술력과 잠재력을 보유한 나라로 분류된다.⁴⁰⁾

이처럼 주변 국가들이 모두 핵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핵부재 선언(1991)을 하였고, 핵재처리 시설을 포함하여 핵무기와 관련된 그 어떤 시설의 유지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 나라다. 확고한 핵우산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핵위협 및 핵무기 개발 잠재력에 관한 가장 취약한 나라인 것이다. 핵폭탄 하나가 수십만 내지 수백만을 희생시킬 수

39) 한국전쟁은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이 이어 인류 전쟁사에서 두 번째로 단기간에 피해자가 많았던 참혹한 전쟁이었으며, 전쟁 규모로도 인류전쟁사에 제12위 규모의 대전쟁으로 기록된다.

40) 정근모, “북한 핵개발과 동북아시아의 안보”, 『한국발전리뷰』(한국발전연구원, 2003년 4월호).

있는 상황에서 핵무기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것은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 심각한 안보 취약국가로 가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한국의 과거 핵무장시도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반대를 해왔던 반미운동세력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그 어떤 반대나 시위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 이유를 미국의 대북한 위협정책 때문이라고 대변하고 있다.⁴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거나 주변국이 한국에 대한 핵안전보장을 약속하고 그에 대한 보장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로 간다면 기존 핵보유국인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핵개발중인 북한으로부터 격렬한 저항을 받아 전쟁직전 상태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 가능하다. 결국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현실성도 없는 일일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핵무장에 임박한 북한과 대치하면서 핵무장도 없고 핵안전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핵우산(nuclear umbrella)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심각한 국가·사회적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주변국의 핵위협에 대한 대처방안과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대응 및 안전장치도 없는 우리가 반미운동에 따라 미국으로부터의 핵우산의 보호를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안보위협에 내모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핵무기 외에도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단히 취약한 환경에 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 수출하고 4,000km가 넘는 대륙간탄도탄을 실험발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 등 북한이외의 주변국을 위협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180km 이하의 미사일만 배치하고 있다. 그것은 현 단계에선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미사일이 없다는 것이고 180km밖에 있는 북한지역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데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고 북한의 미사일 공격시 북한 전역을 커버하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주한미군만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지 않고 미사일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곧 미국과 동맹을 맺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을 대체하는 대안이나 객관적 필요가 대두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을 반대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훼손시켜야 할 이유도 아직 없다. 하지만 반미운동은 수 천년간 우리 민족이 겪은 외국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면서 미국과 미군의 역할을 부정하거나 축소시킴으로써 또 다른 국가안보의 취약과 불안으로 가게 만들고 있다. 안보는 소극적으로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는 침략이나 불법행위로 기존 사회 시스템이 교란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국민이 자신의 재산과 추구하는 가치가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다. 그런 확신이 없는 사회

41) 반미운동세력은 북한의 위협이나 핵무장 등이 모두 미국의 대북한 적대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박종철, 『미국과 남북한: 갈등과 협력의 삼각관계』(오름, 2002).

는 사회적 안정이 확보되지 않으며 재산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안정한 사회로 이끌게 된다.⁴²⁾

이와 달리 반미운동세력은 반미운동을 통해 미국의 존재를 부정하고 주한 미군의 철수를 목적으로 활동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적 취약성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주변국 및 북한의 무력을 억지 할 수 있는 충분한 국방역량이나 우리 민족이 추구하는 가치와 생명을 보호해줄 동맹도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북한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가정을 전제로 우리나라를 안보적 취약상태로 몰아 감으로써 우리 역사에서 계속되어온 국가적 안보취약 상태를 반복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2. 국방역량 저하 및 비용 증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는 곧 안보 역량의 굳건한 보장이라 할 수 있었다. 미국과의 동맹 및 미군 주둔은 한국의 국방력을 보완하는 가장 큰 위치를 점해왔다. 미국은 한국전쟁 직후<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한미 합의의사록>(1954년)을 통해 군사지원을 시작한 이래 1988년까지 무상으로 군사원조계획(MAP)에 따라 55억 달러, 국제군사교육훈련(IMET)으로 1억 7천만 달러 등 총 56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유상 군사지원으로는 대외군사판매(FMS) 50억 5,000만 달러, FMS차관 24억 달러 등 총 88억 3,000만 달러의 지원을 해왔다.⁴³⁾

주한미군의 주둔과 미국의 군사지원과 도움은 안보적 위협 없이, 그리고 안보비용에 대한 과중한 부담 없이 안보역량을 유지하는 근거가 되었다. 실제 한국은 안보 환경이나 위협에도 불구하고 GDP대비 국방비 비중이 매우 낮은 나라중의 하나다. 한국의 국방비는 2002년 기준으로 약 16조 4,000억 원이다. 이는 <표 4>에서 보듯 전체 국가 GDP의 2.8%로 1980년의 6.0%로부터 지난 1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향화된 것이다.⁴⁴⁾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 충돌의 위협이 높은 국가이면서도 세계 평균인 GDP 대비 3.8%보다도 훨씬 낮은 GDP 대비 2%대의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군사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은

42) B. Weingast, D. North 혹은 K. Sheples 등은 정치체제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재산권이 올바르게 지켜지도록 하는 것(to get property rights right)이라고 한 바 있으며 J. Locke 등 대부분의 정치학자는 국가가 해야할 가장 큰 임무도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만큼 자기 재산이 영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실제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장되는 사회에 경제적 성장이나 사회적 안정이 가능하였다. D.North and R. Thomas, *The Rise of the Western World: A New Economic History*(Cambridge Univ. 1973; 이상호 역, 『서구세계의 성장』, 1999, 자유기업센터; K. Shepsle and B. Weingast,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mittee Powe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81, 1987).

43)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2002.

44) 국방부, "국방예산 현황" 국방부 국정감사자료(2002년).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1995년 이후 2.9%에 들어선 이후 거의 2.8%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예산 대비 비중은 1980년 34.7%, 1990년 24.2%로부터 2002년 기준으로는 15.5%이다.

당연히 한미동맹에서 찾을 수 있다. 비록 징병제에 의한 인건비가 제외되고 있지만 한국이 낮은 국방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도 상당부분은 미국과 맺은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의 존재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 국방부가 평가한 주한미군의 보유장비와 물자는 약 140억-259억 달러(16조 8000억-31조원)에 달한다. 주한 미군은 F-16 전투기 70여대, A-10기 20여대 등 100여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 항공전력은 한미 연합공군전력의 30%에 달하고 있다. 특히 A-10기는 1대가 16대의 전차를 공격할 수 있어 1개 비행대대가 작전에 나설 경우 280대의 적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표 4> 주요 국가의 GDP대비 국방비 비중(2000년)

구분	한국	이스라엘	대만	러시아	미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국방비(100만 달러)	12,805	9,373	17,248	58,810	294,695	41,167	4,707	44,417
GDP대비 (%)	2.8	8.9	5.6	5.0	3.0	5.3	4.9	1.0
국민 1인당 국방비(\$)	271	1,512	785	400	1,059	32	1,320	351

자료: 국방부(국방백서), 단, 한국은 정부통계 기준.

<표 5> 주한미군의 전력가치 현황

(단위: 억 달러)

구분	내용	총전력	해외전력	순전력
육군	M-1전차 등 장갑차	13.22		13.22
	MRLS, 패트리엇 등 포병전력 건설 장비	1.73		1.73
	소계	15.88		0.93
해군	해병원정군, 각종함정 / 해외주둔	936.00	936.00	
공군	F-15	16.80	16.80	
	F-16	28.64	8.16	18.48
	A-10	2.46		2.46
	MH-53	1.50		1.50
	E-3	5.40	5.40	
	공대공 / 공대지 무장	28.70		28.70
	항공지원장비	2.16		2.16
	건설장비	0.23		0.23
	소계	83.89	30.36	53.53
기타	육군정보자산	1.17		1.17
	공군정보자산	1.00		1.00
	GCCS-K	0.78		0.78
	소계	2.95		2.95
총계		1038.72	966.38	72.36

자료: 국방부, 『주한미군 전력의 경제적 가치평가』(2000)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만약 미제2사단이 재배치되거나 철수하게 될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전력확보 비용만도 5조 4,800억 원(45억 7,000만 달러)이라고 한다. 지상장비가 약 27억 달러, 항공장비만 18억 달러를 넘는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 군은 주한미군의 역할 축소를 대비하여 2008년까지 향후 5년간 123조 원이 투자되는 군 첨단화 작업을 추진중이고 이를 위해 현재 2.8%인 GDP 대비 국방예산을 3.1%수준으로 증가시킬 계획에 있다.⁴⁵⁾ 주한미군 전체의 전력을 가치로 측정하기 힘들 정도이며 주한 미 2사단의 대체전력만도 년 국방예산(17조)의 32%에 가까운 액수다. 국방부 정책기획국 보고에 따르면 순수 주한미군의 전력만으로도 72억 달러가 넘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연합작전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가

45) 국방부, 2003년 국회제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중앙일보 2003년 9월 27일자 국방부의 <2004~2008년 국방 중기계획> 참고. 중기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정보전력의 확대를 위해 조기경보통제기(AWACS) 개발 및 도입에 2조 원, 차기유도무기 사업에 2조 5,000억 원 등 총 123조 원의 첨단무기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용 해외전력까지 합한다면 1,0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표 5〉 참조).

엄밀한 의미에서 세계 최강국을 제외한다면 ‘자주국방’이란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자주국방이란 다른 국가가 자신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제압에 따른 비용과 희생이 제압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도록 준비하는 것이거나 동일한 이해를 갖는 국가들과 동맹(alliance)을 맺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과 동맹관계를 청산하고 최소한의 ‘자주’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추가적 비용이 불가피하다. 또 대북 억지력을 넘어 주변국인 중국, 일본 혹은 러시아로부터의 자주국방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비용이 요구된다. 주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는 모두 한국을 주된 가상 적(敵)에 조차 포함시키지 않는 수준이란 것을 고려할 때 주변 3개 강국에 독자적으로 맞서 주권을 지키고 위협에 대응할 국방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 국력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동맹을 통한 억지력의 확보가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기에 한미동맹을 저해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목표로 하는 반미운동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주’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추가적 비용부담과 함께 대한민국의 주권의 불안정을 가속화시켜 대한민국을 불안정한 국제질서 속에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그 동맹국이 어떤 나라인가에 따라 동맹군이 가져다주는 국방 안보상의 가치와 이익은 차원을 달리하게 되는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와 군사력 규모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첨단의 기술 및 정보를 가진 나라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동맹으로 인한 직접적 이익보다 동맹국과의 안보협력 및 상호교류, 그리고 정보교류 등이 가져다주는 간접적 이익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3. 첨단전쟁 능력과 군사정보의 취약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최첨단 군사기술 능력을 갖춘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전쟁수행능력을 제고시켜왔다. 한미동맹에 따른 합동군사 훈련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현대 첨단전쟁 수행 능력을 갖춘 군으로 성장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을지 포커스렌즈(UFL)훈련, 연합전시증원(RSOI)훈련 등의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습득하기 어려운 첨단 군사기술을 실제적으로 다루고 습득하는데 기회가 되어 첨단화되고 정보화되고 있는 현대 전쟁의 수행능력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

을지포커스렌즈(UFL)를 통해서 한국정부와 군은 방어를 위한 〈총무계획〉 및 〈작전계획 5027〉 수행절차를 숙달하고 군사분야의 종합 지휘연습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연합전시증원(RSOI: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 Integration) 훈련은 유사시 미 증원군의 한반도 전개를 위한 것으로 한미연합사 및 주한미군사령부와 미 증원부대가 한국 부

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독수리연습(FE)은 연합작전 능력의 향상과 미 증원전력의 전개와 합동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기동연습이다. 한국이 미국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합동군사훈련은 한국군을 현대전에 맞는 첨단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로 유지할 수 있으나 미국을 거부하는 반미운동에 따라 주한미군이 철수되거나 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되지 못한다면 현대전을 수행하고 첨단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저하가 불가피할 것이다.⁴⁶⁾

더구나 세계 최첨단군인 미군 제2사단의 재배치(relocation) 문제는 또 다른 안보환경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비록 주한 미군 제2사단의 재배치는 미국의 전략변화와 전세계 미군의 재배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안보환경이나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한국과 미국간에는 주한미군의 역할조정과 재배치문제가 협의 중에 있으나 미국이 미2사단을 수도권 이북에서 한강이남지역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은 명백해졌다. 미 국방정보국(DIA) 가이 애리고니 동아시아국장은 “주한 미군의 재배치는 필연적으로 미군 숫자의 감축을 수반할 것”이며 감축 규모는 1단계에서 5,000명, 그 다음 단계에서 5,000명에서 1만 명 규모로 총 1만 명에서 1만 5,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던 과거의 동아시아주둔군 재배치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도 있다.⁴⁷⁾

미 제2사단의 재배치는 반미운동의 결과로 볼 수만은 없겠지만 군사훈련 중인 미군 장갑차를 탈취하고 시위를 벌이는 행위를 비롯한 주한미군에 대한 적대적이고 부정적 행동은 주한미군의 방위역할의 위축과 한국에 대한 방어외지의 약화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실제 미국언론은 “미국은 제국주의가 아니므로 미국을 원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나라에 미군을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되기도 했다.⁴⁸⁾ 그런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미 제2사단의 재배치는 한국사회에 커다란 의미를 가져온다. 비록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흔히 말하는 인계철선(trip-wire)이 철수되는 것이고 수도권의 전방지역의 방어를 우리 한국군이 전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대규모 도발이나 서울침략에도 미국이 무조건적으로 참전하는 것을 보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 군과 미 제2사단이 보유한 대북 억지력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미 제2사단이 보유하고 있는 155mm 자주곡사포인 M-109A6(일명 ‘팔라딘’) 30여문과 컴퓨터화된 사격관제 시스템을 갖춘 227mm 다연장로켓(MLRS) 30여문 AN TPQ37대포 레이더 등은 북한의 장사포 및 다연장포의 공격과 동시에 즉각 사격위치를 파악, 탐지하는 시스템과 연동되어 대응하고 무력화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사정거리 300km가 넘는 ATACMS 블록1 지대지 미사일을 당장 우리 군이 대체하기 어려운 것이고 주한미군은 ATACMS 블록

46)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ibid.

47) 새시대전략연구소가 개최한 <한미관계협의회 서울총회 세미나>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와관련하여 한국 국방부는 첨단 무기 도입 계획인 ‘자주국방 비전(vision)’을 세워 2003년 5월 6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48) 『The New York Times』(Dec. 26, 2003)

1A 미사일을 약 300발정도 보유하고 있다.⁴⁹⁾

이와 같은 북한의 1만 1,000문이 넘는 장사포나 다연발포 공격을 조기 무력화할 수 있는 미군의 자동탐지 및 대응시스템은 2,000만 수도권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므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가진다. 지난 이라크전쟁에서 보듯 미군 1개 사단은 이라크전쟁을 거의 단독 수행할 만한 가공한 전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 미군의 철수가 아니더라도 미 제2사단의 부분철수 내지 재배치 자체가 가져오는 안보상의 변화는 커다란 것이다. 그에 따라 한국대통령이 미군의 재배치를 핵문제 해결이후로 조정해 줄것을 요청하고 고건 국무총리가 반미운동이 격렬했던 직후인 2003년 5월 9일 총리자격으로는 미 2사단을 사상처음으로 방문하고 기업인 협의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 2사단을 방문하기도 했던 것은 이와 같은 전방 미군이 가진 안보적 가치가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판단의 결과다.

더구나 한국사회의 반미운동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가장 위협적인 문제는 대북 정보력의 손실이다. 현대전은 정보력이 좌우한다.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쟁과 도발의 억제를 위해서는 북한 군사력의 동향에 대한 면밀한 감시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우세한 정보능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보다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하고 더 많은 상비군을 배치하여 대비해야 하며 적의 초기 기습공격으로부터 노출되어 인명과 전력손실이 불가피하고 이에 대한 사회불안도 훨씬 가중된다.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첨단 정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있고 이를 상당부분 한국과 공유하고 있다. 앞의 <표. 5>에서 보듯 미군의 정보자산만도 3억 달러에 달하지만 이것이 거부될 때 우리 군은 독자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게 된다. 미군은 U-2기 등 각종 첨단 정보수집 능력을 갖추고 이를 한국전투작전정보본부(KCOIC) 및 연합분석통제본부(CACC)에 보내 북한군의 움직임을 분석·파악하고 있다.⁵⁰⁾ 그러나 세계 최고, 최첨단의 정보능력을 갖춘 미국과의 관계 훼손에 따라 한미동맹의 와해나 미군철수는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능력을 공유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정보역량의 심각한 제한으로 연결된다.

49)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국』, ibid.; 오동룡, “주한미군 철수시 전력 대체비용은 얼마나 들까?”, 『월간조선』(2003. 6).

50)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국』, ibid.

V. 반미운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경제 안정기반의 훼손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의 확장을 막고 자유민주세계를 지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긴밀화된 것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세계 최강대국이자 세계 최고수준의 경제·기술대국과의 만남이었다. 달리 말하면 세계최고수준의 국가와의 연대와 접촉을 통해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모델과 제도를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까지를 공유하게 된 것이다.⁵¹⁾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흔들린다는 것은 미국과 함께 지향해온 모든 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반미운동은 미국이라는 특정국가에 대한 반대를 넘어서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수준의 가치, 제도, 기술을 부정하거나 과소 평가하는 경향으로 가게 만든다.

제2장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은 그 자체로도 전세계 경제규모의 32%를 차지하며 국가 GDP가 10조 달러를 넘는다. 미국은 기업 경쟁력과 기술보유 등과 관련이 깊은 세계 500대 기업 중 40%에 육박하는 192개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불과 13개 (2.6%)에 불과하다(〈표 6〉 참조). 세계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글로벌 경제체제, 국가관계보다 기업관계가 중시되는 경제로 변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필연적으로 미국기업과 거래를 하고 협력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의 GM이나 Ford회사의 매출액이 우리나라 총 수출량과 차이가 없는 현실에서 대다수 미국국적 기업과의 관계는 더없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표 6> 주요국의 세계 500대 기업 보유 수

순위	국가	기업수	자산총액 (\$mil)	기업당 평균자산	종업원 (명)	기업당 평균종업원
1	미국	192	15,902,199.6	82,824.0	18,121,204	94,381.3
2	일본	88	8,067,065.6	91,671.2	4,822,845	54,805.1
7	한국	13	484,357.0	37,258.2	329,211	25,323.9
8	중국	11	1,997,356.5	181,577.9	4,047,957	367,996.1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51) 함재봉, “한미동맹의 특징은 군사적 연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로선 세계적 조류를 이끌던 글로벌 스탠더드를 한국이 받아들이는 과정이기도 했다”고 지적한다. The Heritage Foundation, 50th Anniversary of the U.S.-ROK Alliance Seminar, Jul. 25, 2003.

한국은 이미 세계경제의 일부가 되어 있고 분리될 수 없는 일원이 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무역의존도는 69%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다.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 기업이 차지하는 생산량이 국민총생산량(GDP)의 13.0%인 73.5조 원에 달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한 대외수출은 227억 달러(2000년 기준)로 전체수출의 13.2%를 차지하고 있다.⁵²⁾ 또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투자 비율은 40%를 넘어서 있다. 그만큼 한국경제는 한반도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민족’경제가 아니라 세계경제의 일부인 것이다.

우리 기업과 국민이 해외에 나가 활동하는 것이나 외국 기업과 국민이 한국에 들어와 기업하는 것에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밀접하고 많은 관계가 유지되어온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투자에 있어서나 무역에 있어서 건국 이래 한국의 부동의 파트너다. 그럼에도 특정국가, 그것도 가장 경제력이 크고 많은 거래가 불가피한 나라를 적대하는 사고는 경제적 불안의 원인이 되고 향후 우리 경제의 발전 가능성을 어둡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미국을 배척하는 반미운동은 세계 경제 체제로부터의 단절을 추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이 추구하는 ‘주체’나 ‘자력갱생’이니 하는 폐쇄적 개념이 멋있어 보이고 민족의 대안인 것과 같은 착각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capital)은 국적을 불문하기 마련이다. 가장 높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지역과 국가를 가리지 않는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외국 자본이나 미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때 자본이 굳이 한국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1997년에 겪었던 것처럼 경제불안 그 자체만으로도 곧 대규모적인 자본 철수로 연결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보는 군사적 안보를 넘어서 경제체제를 지킴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포괄적인 것이다. 세계경제 주체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가 한국에 투자하고 사업하는 경제주체의 주된 관심사항이다. 실제 외국 기업과 신용평가기관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변수를 관리하는 정부 및 경제주체의 정책과 능력과 의지다. 군사정책에 종사하는 군인이나 관료까지도 가장 집중하는 것은 대외적 국방과 함께 대외적 경제주체와 신용 평가기관에게 자국의 안보가 확고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이 엄연한 현실이다.⁵³⁾

국제경제 주체들이 특정 국가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 나라의 경제안정이다. 그것은 우리와 달리 세계 기업들이 북한에 전혀 투자하지 않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는 『2003년 세계투자보고서』에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을 나타내는 FDI(외국인직접투자) 수행지수(Performance Index)

52) 국무조정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2003년) 자료

53) 차영구, ibid, 차영구는 외국의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것은 한미동맹이 튼튼하고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히 이행될 수 있느냐와 한국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였다고 밝히고 있다.

조사에서 한국은 전체 140개 국가 중에서 92위에 머물렀다.⁵⁴⁾ 우리 세계 제12위권의 경제 규모와 수준을 고려할 때 투자 매력에 매우 낮은 국가로 판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대 한국 FDI(외국 직접투자)의 변화

(단위: 10억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8.85	15.54	15.22	11.29	9.1	(2.66)

자료: 산업자원부, 괄호는 상반기 액수

안정된 국가에 투자가 몰리고 불안한 국가에서는 기존의 투자도 빠져나가기 마련인데 한국에 대한 외국의 직접투자(FDI)는 1999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표 7> 참조). 지난 1999년에는 약 155억 달러의 직접투자가 있었으나 2001년에는 약 113억 달러로 줄어들더니 2002년에는 91억 달러로 줄었다. 2003년에 들어서는 상반기 전체가 27억 달러도 안 되는 극심한 투자 감소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이는 1996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한국 경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특히 국방안보와 밀접히 연계된다는 것은 1997년 외환 위기시에도 분명히 드러난 바 있다. 당시 한국에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미국의 코언 국방장관은 안보동맹의 파트너인 한국의 역할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IMF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하였고 미 클린턴정부가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물론 외국인 투자환경이 악화되거나 투자액수가 급격히 축소되는 것과 한국의 반미운동과 직접적으로 다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이 가진 안보 위협의 상황과 대미관계 특히 주한미군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미국과의 관계악화는 곧 한국 경제안정의 최대 불안요인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다.

2. 반자유 · 반시장주의

역사적으로 주한미군의 변동, 특히 미군의 주둔과 감축은 한반도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시켜 왔다. 대한민국 건국이후 역사에서 미군 주둔은 한국 안정의 보장장치였고 미군 철수는 북한의 침략전쟁과 위협을 가능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그 후 미군의 대규모 참전은 전쟁을 막고 종결시켰고 전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2개 전투사단과 지원부대를 포함하여 약 5만 명의 미군 주둔은 한국 안보와 안정의 기반이 되어왔다.⁵⁵⁾

54) 조선일보, 2003년 9월 4일자.

55) 서울신문사, “주한미군 30년”: 1945-1978, (서울, 서울신문사, 1979) pp. 103-110.

그것은 미국 및 주한미군의 변동이 곧 대한민국이 어느 사회로 갈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 같은 상호연계가 많이 약화되고 있지만 과거 우리 사회에는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일관되게 시장경제를 유지하며 자유민주주의 등 시장경제 체제사회로 남을 것인가와 밀접히 연계되어 왔다.

그 첫 경우가 애치슨라인에 따른 미군 완전 철수다. 1945년부터 주둔해오던 8만 명의 미군은 1949년 군사고문단만을 남기고 철수하였고 그 후 1년도 안되어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대규모 전면 침략을 감행하였다. 결국 미군 육군 7개 사단, 1개 해병사단 등 총 32만 명이 참전함으로써 한국의 공산화를 막고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닉슨 독트린(1969)에 따라 미 제7사단의 철수가 결정되고 추가적인 철군이 예상되면서 한국의 안보불안을 초래되자 한국이 제2의 월남과 같은 공산주의로 갈 수 있다는 불안이 가속화된 바 있었다.

그러나 카터대통령을 이은 레이건대통령의 미군철수 백지화로 한국은 상당한 안정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비록 미 제7사단은 철수하고 155마일 휴전선을 모두 한국군이 담당하게 되었지만, 전방으로부터 DMZ와 서울 사이에 미 제2사단이 주둔함으로써 수도 서울에 대한 사수 의지를 밝힌 점은 한국 사회가 안정적으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일관성있게 지향해나갈 수 있다는 보증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국은 세계 제5위 원유 소비국이다. 과연 유사시에도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이 상존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중동에서의 대규모 전쟁 혹은 동남아시아 등에서의 유사시에 한국이 중동으로부터 원유를 수송해올 능력은 사실 거의 취약한 상태에 있다. 우리보다 많은 원유 소비국인 일본은 유사시에도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해양군사력을 확대시켜 왔지만 중동에서 한국으로까지 이어지는 수송로의 안전을 우리 독자적 군사력으로 확보해내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과의 관계는 경제나 과학기술의 협력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 전망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비한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도움과 협조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동맹의 문제는 단지 군사적 안보를 넘어서 다른 모든 영역과의 상호관계에 있는 포괄적인 것이다.

더구나 시장경제의 발전은 곧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다.⁵⁶⁾ 그러나 반미주의의 확

56) A. Leftwich, eds., *Democracy and Development: Theory and Practice* (Polity Press, 1996).

산은 북한에 대한 호의적 태도와 관계를 이끌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비판과 나아가 서구적 가치나 시장체제에 대한 거부로 연결되고 있다. 반미운동의 영향으로 실제 ‘동맹 우선’이라는 사고보다 이제 ‘민족 공조’를 주장하는 국민의 비율은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민족 공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비율(39.4%)이 동맹을 우선하는 비율(24.4%)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있다.

특히 서구문명을 상징하는 미국에 대한 반대운동은 자연스럽게 반서구주의와 연결되면서 세계적 관계로부터 아시아 내지 북한 중심적 세계관을 확대생산하고 있다. 그와 같은 탈세입북(脫世入北)⁵⁷⁾의 논리는 곧 보편적 가치로부터 아시아 중심적 가치 그것도 ‘북한적 가치’를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 그 결과 북한이 전근대적이고 폐쇄적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만든 ‘자주’, ‘민족’ 등의 가치가 반서구, 반시장경제적 논리가 되어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3. 경제 능력의 잠식

반미주의가 야기하는 또 다른 문제는 우리 사회의 경제능력(economic capability)을 잠식한다는 데 있다.⁵⁸⁾ 경제능력이 잠식되는 것은 사회의 주된 역량이 경제성장적 요소에 투여되지 않거나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가 경제활동의 참여와 경제적 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를 만들거나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직업과 부의 축적을 중요시하지 않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는 엄청난 것이다. 특히 노스(North)가 지적하는 것처럼 사회의 제도적 기반과 사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괴리현상이 발생할 때는 경제활동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증대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경제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⁵⁹⁾

반미운동의 대상이 된 미국은 전통적으로 다른 서구유럽의 어느 사회보다 무역과 상업 그리고 산업활동과 기업활동(business)에 우호적 태도를 가진 사회다. 그리고 부(wealth)야말로 남보다 사회를 위해 더 가치있는 일을 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징표다.⁶⁰⁾ 그러나 반미운동은 경제활동과 경제적 부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외국의 자본이 민족자본을 지배하거나 중

57) 김용서 교수는 반미투쟁 및 남북 민족공조적 분위기의 도래는 서구로부터 탈피하여 아시아로 향한다는 탈구입이나 미국으로부터 탈피하여 아시아로 향한다는 탈미입아 현상을 실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대한민국의 이념 및 체제위기와 미국”, 『한국발전리뷰』(2003년 5월호).

58) 여기서는 경제능력을 사회능력과 구분없이 사용하고자 하며 경제능력은 사회·정치적 제도에 의해 발생하고 경제적 기회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경제조직의 태도와 특성을 말한다. M. Abramovitz & P. David, “Convergence and Deferred Catch-up: Productivity Leadership and the Waning of American Exceptionalism,” *The Mosaic of Economic Growth*, eds. by R. Landau(Stanford Univ. 1996).

59) D. North, *Transaction Costs,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International Center for Economic Growth, 1992).

60) W. Parker, “Europe, American and the Wider World,” Vol.2. *American and the Wider World*.(Cambridge Univ. 1991); M. Abravovitz and P. David, *Ibid*.

속 경제로 만든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 반미운동단체는 미군이 각종 환경범죄, 인권유린 혹은 각종 범죄의 온상인 것처럼 만들어 부정적 인식과 반미주의를 고조시키고 있다. 실제 미군에 의한 범죄는 동일한 숫자의 한국군의 범죄에 비하면 극히 낮은 수준임에도 미군을 범죄자 집단인 것처럼 만드는 것은 미국과 교류하고 협력해야 할 국민전체에게 미국을 부정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⁶¹⁾

미국을 부정적으로 보도록 하는 것은 실제 미국과 전혀 다른 미국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미국과의 인적·물적 거래를 위축시키고 선진 경제체제인 미국과 인적교류 및 자본을 통해 전해지는 기술과 제도의 이전을 무시하게 만든다. 특히 경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기술도입과 개발의 문제다.⁶²⁾ 미국은 연구개발비, 과학기술예산 그리고 연구원수에서 모두 압도적 위치에 있다. 연구개발비를 보면 미국은 1,847억 달러를 사용하는 반면 한국은 135억 달러로 한국의 연구개발비는 미국의 7.3%수준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과학기술예산도 미국은 706억 달러이지만 한국은 3억 달러로서 미국의 4.2% 수준이고 연구원 수도 미국은 98만 명이 넘는 숫자이지만 한국은 10만 명도 채 되지 않아 미국의 10%수준에 머무른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총 2,300여의 국제특허를 출원 세계 8위에 랭크됐다. 하지만 미국은 4만 3,000건에 달하고 있고 각각 1만 3,000건의 독일과 일본 등 다른 모든 국가를 압도하고 있다.⁶³⁾

<표 8> 주요국의 연구개발 동향

	연구개발비	과학기술예산	연구원수
미국	184.7	70.6	982.7
일본	138.6	25.8	622.4
독일	53.1	11.7	229.8
한국	13.5	3.0	98.8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61) 임광규, “대한민국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한국사회의 반미분위기와 한미동맹”(한국국방연구원, 2002).
 62) L. Lau, “The Sources of Long-Term Economic Growth: Observations from the Experience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bid.*; 한편 Salter는 자본(capital)은 기술적 진보를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본이야말로 경제발전의 동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A. Maddison, *Dynamic Forces in Capitalist Development: A Long-Run Comparative View* (Oxford Univ. 1991).
 63) http://bric.postech.ac.kr/bbs/daily/krnews/200202_1/20020207_23.html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세계경제 체제에서 우리는 여전히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기술의 도입과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나라임을 말해준다.⁶⁴⁾ 그럼에도 반미운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경제활동과 기술의 도입 그리고 개발에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을 만들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유 재산권(property rights)에 대한 거부감까지 함께 나타나고 있다.⁶⁵⁾ 이와 같은 결과는 법의 지배를 위축시키게 되고 유형자산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 한 예가 곧 국내자산의 해외이전이다. 실제 재외동포들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1년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재산반출이 2002년에는 5억 달러에 달해 2배 가까이 급증했고 2003년에 들어서는 8월까지만 해도 이미 6억 2,000만 달러를 넘어섰다.⁶⁶⁾

반미주의가 만들어 내는 경제적 환경은 경제활동과 사회적 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선진체제를 가진 국가와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을 중요시 여기지 않도록 만든다. 나아가 기술이전의 중요성이나 사유재산제도를 통해 획득되는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긍정적 인식을 훼손시키고 있다. 그것은 결국 경제발전이 우호적인 사회 제도의 발전을 막게 되어 경제능력(economic capability)의 잠식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64) 사공일, 『세계 속의 한국경제』(김영사, 1993), pp.162-168.

65) 김한웅, “전후 50년 한국경제성장에 끼친 한미동맹의 역할”, 『한국발전 리뷰』(2003년 5월호), pp.65-67.

66) 매일경제, 2003. 9. 18일자.

VI. 반미운동이 사회모델에 미치는 영향: 지향 가치의 변화

1. 국가 정체성(identity)의 혼란

우리 사회의 반미운동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훼손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국가 정체성에 혼란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하였다. 반미운동은 국가 정체성이 반외세(反外勢)에 있다는 것으로 몰면서 미국을 외세로 규정지었다. 그리고 반외세 투쟁의 선두에 북한과 김일성·김정일이 있었던 것처럼 강변하고 북한에 마치 민족적 정체성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왔다. 반미운동은 스스로를 항일투쟁의 연장이라고 말하며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세력 자체가 친일자들의 정권이기 때문에 정체성이 없고 지금도 일본을 대체한 친미정권이기에 여전히 정체성이 없는 것으로 선전해왔다.

그 결과 반미운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정체성이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의식을 심어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회의하도록 만들었다. 반미운동의 논리를 제공해온 강만길, 강정구 등은 이승만 정권에서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파들이 국무총리, 장관, 군참모총장 등을 장악하였지만 북한 정권은 동북항일군 등 일본군과 싸운 조국광복회 및 조선독립동맹 등이 주축이 되어 역사적 정당성과 정체성을 갖는다고 반복하며 김일성세력의 집권을 정당화하였다.⁶⁷⁾ 반미운동적 시각은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될 나라로 만들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만들어간 인사들을 반민족적 인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초대정부의 구성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듯 단 한 명의 친일자도 찾을 수 없다.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국회의장 신익희, 대법원장 김병로, 그리고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 이범석과 문교장관 안호상에 이르기까지 모두 항일투사가 아닌 인사가 없다. 오히려 농림장관 조봉암, 국회부의장 김약수에 이르기까지 좌파 인사까지 망라한 정부였다.⁶⁸⁾ 그럼에도 반미운동 세력은 대한민국이 외세의존 국가이자 친일국가라고 전파하면서도 북한이야말로 소련의 꼭두각시로 출발하면서 같은 민족을 대상으로 침략전쟁을 벌인 반민족 세력이었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다.

북한의 김일성정권은 극좌파이면서도 김일성을 비롯하여 오직 중국이나 소련에 줄을 대고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한 괴뢰(傀儡)정권이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모든 민족 인사들을 배제하고 만든 좌파 괴뢰정부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출범한 고위인사들인 부수상 박헌영, 내무상 박일우, 재정상 최창익, 사법상 이승엽 등 거의 모두가 숙청되어 처형되고만 극단적

67) 강만길, “냉전세력의 정체와 극복방안”, 이제 문제는 냉전세력이다(2001). 그런 논리에 근거하여 1996년 한총련 의장(정명기)은 “김일성주석은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고 해방 이후 한반도에 들어와 친일파 청산과 새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였다”면서 김일성사망 2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애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는 것이다.

68) 이경남, 『큰 역사에 바치는 작은 증언』(알파, 2002), pp.14-26.

인 좌익 파시즘적 독재체제였다. 더구나 북한은 같은 민족을 대상으로 대규모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도발을 계속하면서도 민족을 굽주리게 하고 우리 민족이 전세계로 유리걸식을 하도록 만든 극단적 반민족, 반인륜적 체제다.

그러나 한국의 반미운동세력은 이런 북한을 민족정통성의 주체라고 주장해 왔다. 반대로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세계보편사적인 인권과 재산을 중시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걸어온 대한민국을 반민족적이라고 말하는 역설을 기정 사실화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지키고 발전시킨 주체나 국민의 선택에 의해 나라의 지도자가 된 김영삼, 노태우보다는 오히려 전체주의 독재정권을 이끌어온 김일성과 김정일이 더 선호되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⁶⁹⁾

그리고 반미운동은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노력하고 희생한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시키면서 친북활동이나 대한민국에 대항한 세력은 민족적이고 민주적이라고 하는 역설을 확산시켜왔다. 예를 들면 한국전쟁시 침략자인 북한군이 학살한 5만 9,964명의 명단이 새롭게 발견되었음에도 정부나 언론은 물론이고 그 어느 시민단체에서도 이를 중시하지 않고 일관되게 무시하고 있다.⁷⁰⁾ 반면 전쟁 중 후퇴하던 미군의 오인 사격에 의한 충북 노근리의 희생에 대해서는 마치 미국이 양민을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자행한 것처럼 ‘집단학살’이란 표현을 써가며 사회 전체가 흥분했던 것 등은 바로 한국사회에서 반미화의 진행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반미운동은 나아가 우리의 통일의 방향에서도 근본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반미운동은 미국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면서 젊은 세대로 하여금 ‘체제 변혁적 통일’ 혹은 ‘체제절충적인 통일’의 방향으로 가도록 할 것이라고 좌파 지식인들은 기대했다.⁷¹⁾ 실제로 반미운동은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의 방향을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가야할 지향가치 중심으로 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이 가진 기존 체제를 혼합, 절충되는 것이거나 수렴되어야 하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켜왔다.

그와 같은 결과는 자유민주주의와 사유재산에 입각한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을 국민에게 불어넣고 발전시키기보다는 북한의 소위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통일의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치 북한의 제도나 가치와 절충해야 하거나 오히려 북한이 견지해온 가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흐름을 확산시키는 데까지 이르렀다.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폄훼와 부정, 그리고 통일의 방향에 대한 혼란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69)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도자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일성, 김정일의 선호도는 김영삼, 전두환, 노태우보다 항상 높게 나오고 있다. 정치지도자의 평가는 북한의 김정일(4.38), 김일성(4.05)이 남한의 이승만(3.26), 김영삼(2.66), 노태우(2.42)보다 높았다. 김광동, “전후세대의 대북관과 그 처방”, 『북한』(2002. 8).

70) 월간조선사, 『6·25 사변 피살자명부 : 피살자 5만 9,994명』(2003).

71) 강만길, 서중석 외 “한국 근현대사의 성격과 민족운동”, 창작과 비평, 제16권 제2호(1988, 여름).

대한 해체를 촉진시키고 국민들이 자기 공동체에 대한 수호와 애착을 저버리게 만든다. 그 결과는 자기 사회를 버리고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이민이나 가겠다”는 사회풍조를 만들고 자기 국가를 자기가 만들고 지키겠다는 주인의식의 상실이라는 공동체 해체현상을 가속화시키게 되는 것이다.⁷²⁾

2. 사회적 가치의 전도

반미운동은 미국의 정책에 대한 반대를 넘어 항상 미국이 추구하거나 상징하는 가치에 대한 반대로 이어져왔다. 그 결과 반미운동은 우리 사회가 지향할 가치의 혼돈을 부추겨 왔다. 반미운동을 주도해온 북한을 지지하며 반미운동 그 자체를 스스로 ‘진보’로 규정짓게 만든다. 북한은 항상 “현대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 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어떠한 혁명투쟁도 진보적 운동도 승리할 수 없다”고 말하며 반미투쟁이야말로 “전세계 진보적 인민들”이 직면한 문제해결의 기본고리라고 선전한다.⁷³⁾ 그런 자의적인 ‘역사발전과 진보’개념은 사회 방향과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왜곡시키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반미운동세력은 자신들을 진보라고 규정하고 자신들의 지향가치가 ‘민주’, ‘평화’, ‘반전’이라고 말하며 그런 차원에서 이라크전쟁도 반대하고 있다.

각종 지표(index)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듯 반미가 사회적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국가들은 하나같이 세계사의 보편가치와는 거꾸로 가는 사회였으며 반민주적인 독재국가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한 국가였다. 북한은 스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며 조선민족의 이익, 민주주의, 인민의 인권, 그리고 공화주의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지향하는 것처럼 표방하나 실제로 북한에 그 어떤 민족의 이익이나 민주주의도, 인민의 인권이나 공화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반미운동은 민족과 자주를 내세우면서도 그 실제로는 민족의 삶도 보장하지 못하고 민족의 독립과 번영도 보장하지 않는 오직 김일성·김정일이라고 하는 특정인의 사적 체제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이란, 쿠바, 이라크, 리비아, 북한 등 세계에서 가장 반미주의가 강한 국가들의 특징은 모두가 현대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봉건적 독재체제를 만들어 온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에 대한 각종 지표가 말해주듯 전세계 161개국에 대한 경제자유도(economic freedom)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북한은 최하위인 161위로 경제자유가 없는 가장 최악의 나라였다. 그리고 이라크는 한 순위 위인 160위였고 그 위에 리비아(159위), 이란(154위) 등도 큰 차이가 없

72) 이한우, 『대한민국은 난민촌인가』(책세상, 2002).

73) 북한은 진보라는 말을 일상화시켜 반제국·반미투쟁이 곧 진보라고 규정짓는 바 “반미투쟁은 전세계 진보적 인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근본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기본고리이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의 승리의 근본조건으로 된다”고 밝히고 있다. 현대조선역사, 앞의 책, p.532.

다.⁷⁴⁾ 달리 말하면 가장 반미가 심한 나라는 모두가 가장 폭압적인 정치·경제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 UN 통계에 따르면 북한, 이란, 이라크, 쿠바 등 대표적 반미국가는 지난 36년간(1960~1995)의 평균 경제성장률에 있어서도 이라크 -4.6%, 이란 -1.9%로 모두 마이너스 경제성장국이고 다른 국가인 북한과 쿠바는 자료제출 거부로 유엔에서는 통계조차 내고 있지 못하는 국가다.⁷⁵⁾ 반면 반미세력이 가장 공격하는 미 동맹국 한국은 지난 36년간 연평균 성장을 7.1%로 전세계 1위였고 한국은 대만 일본 등과 함께 전세계에서 소득 평등수준도 가장 높은 나라였다.⁷⁶⁾

반미운동의 주도세력은 역사적 ‘진보’는 북한에 있고 미국 제국주의와 싸우고 대결하는 것이 보다 ‘민족적 가치’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 결과로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가치가 전도(顛倒)되어 ‘진보(進步)’라고 자처하는 세력이야말로 가장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 사회를 지향함으로써 사회적 가치혼란을 가중시키고 실체와 근거도 없는 ‘진보-보수’ 내지 ‘개혁-반개혁’ 논쟁으로 가도록 만든다. 더구나 반미세력은 반평화·반민주적 전쟁위협세력을 옹호하면서도 항상 명분과 구호로는 평화와 민주, 그리고 반전을 말함으로써 무엇이 역사발전이고 국제평화이자 인권향상인지에 대해 사회적 가치혼란상태를 만들어 우리사회에 지향가치의 부재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역사 퇴영적인 북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반통일주의나 반민족주의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회적 논쟁에서는 정부 역할의 문제나 분배와 성장 등과 같은 정상적 진보-보수간의 논쟁은 없어지고 사회가 퇴영적이고 반역사적인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냐 아니면 북한을 부정하는 세력이냐는 논쟁이라는 비생산적 수준에 머물게 만들었다. 그것도 반미적 대북 우호세력은 북한에 살고 있는 2,000만 민족에 대한 우호가 아니라 평화 파괴적이고 반민주적인 김일성·김정일체제에 대한 호의적 집단이 되어 ‘민족’과 ‘자주’, 그리고 ‘평화’와 ‘반전’을 말함으로써 가치 착종(錯綜)현상을 확대시키고 있다.⁷⁷⁾

3. 책임 회피적 폐쇄주의

건전한 반미 혹은 건전한 미국 비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대미 의존성과 의존주의적 사고를 없애고 자기 책임주의를 강화시키는데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74) The Heritage Foundation, Index of Economic Freedom(2000).

75)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8(Oxford Univ., 1998).

76) 2위는 싱가포르로 지난 36년간 평균 6.4%였다. IBRD, *The East Asia Miracle*(Oxford, 1993).

77) 진보적 신문의 상징인 프랑스 Le Monde지는 2002년 12월 31일 제1면부터 제3면까지 북한이 광신적 사교집단이라고 표현하면서 북한체제의 자유와 민주주의 문제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언론이 그런 표현을 썼다면 반통일주의로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그 외 한국사회의 진보-보수간의 착종현상에 대해서는 김광동, “한국 ‘진보주의’의 사상적 기반과 실천의 반진보성”, 한국발전 1996년 가을호(한국발전연구원, 1996 가을) 참조.

서 펼쳐지는 반미주의는 대외의존성의 극복이나 자기 책임주의의 강화가 아닌 자기 역사에 대한 책임의 회피로 이어지고 있다. 그 같은 책임 전가주의는 건전한 국제관계에 대한 대안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대외적 폐쇄주의, 그리고 다른 한편으론 북한에 대한 또 다른 의존주의로 연결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본질이 있다.

남북분단의 책임이 미국에 있고 한국전쟁은 혁명적 성격을 갖는 것인데도 미국의 참전에 따라 좌절된 통일이자 좌절된 혁명이라는 반미운동의 인식은 마르크스주의 사회운동 모델을 기초로 한 부르스 커밍스(B. Cumings) 논리의 연장선에 있다.⁷⁸⁾ 미국과 미군이 한국의 통일을 방해하고 있으며 광주사태(1980)는 미국이 배후 조정한 책임자이고 미국이 군사정부를 지원했기 때문에 한국에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반미운동의 논리확산과 강화를 위해 구사하고 있는 미국책임론은 실제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자기 국가에 대한 자기책임성의 부재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⁷⁹⁾

1989년에 조사된 ‘대학생 정치의식’ 조사에 따르면 남북분단의 원인이 미국에게 있다는 것이 응답이 73.1%, 한국전은 미소간의 대리전이라는 응답이 79.5%, 미국은 한국정치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있다는 응답이 87.9%, 한국이 미국에 군사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응답이 86.0%에 달하였다.⁸⁰⁾ 이처럼 자기 역사에서 맞이한 제반 문제와 결과를 모두 특정 국가에 부과함으로써 책임 회피로 이어지고 책임회피는 곧 자기가 자기 역사를 개척하기 위해 해야 할 자기 의무나 역할을 회피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자기 책임의 회피논리는 1997년에 있었던 외환위기에 대한 인식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비록 외환위기가 미국책임이거나 미국 투기꾼의 장난이라는 논리는 크게 확산되지 않았지만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외환위기 내지 금융위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한국 외환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도와준 국제 금융기구인 IMF를 언급하며 ‘IMF 위기’라는 표현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는 “IMF때문에”라는 표현을 쓴다. 그와 같은 표현방식은 자신의 문제에서 발생한 위기가 마치 IMF 때문에 초래되어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한국사회의 반미운동은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켜 사회 구성원이 자기 역사에 대한 책임회피나 자기 역할의 부정으로 가도록 만든다. 미국의 지원을 받고 미국에게 동맹관계를 요구해서 맺은 한미동맹을 마치 미국이 그렇게 만들었고 우리는 약소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

78) B. Cumings, 『한국전쟁의 기원』(김자동 역, 일원서각, 1986); 김용직, “한국전쟁과 사회운동: 부르스 커밍스의 사회혁명-내전 가설 비판”, 『한국정치학회보』(1998, 봄).

79) 한국사람들이 모든 잘못의 원인과 책임을 강대국에게 돌리는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이호재, “전후 한미관계의 재조명”,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동아일보사, 1987) 참조.

80) 황명희, “한국대학생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반미의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이는 5점 척도에 의한 것으로 1989년 9월 서울·고려·연세·숙명여대 등 4개 대학 재학생 589명에 대한 할당표본에 의한 결과이다.

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과정 자체를 달리 해석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그 관계는 빨리 청산해야 한다는 인식을 형성시키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권국인한 주한미군은 우리 정부가 요청해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종속국이 아닌 이상 필리핀처럼 우리 정부도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면 당연히 미국이 철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반미운동세력은 주한미군은 마치 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인식시키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그 결정의 주체인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주장하지 않고 미국이나 미군에게 직접 요구하는 운동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상징이었으나 반미주의는 미국을 제국주의이며 우리 민족의 이익에 반하는 나라로 묘사한다. 미국을 제국주의로 묘사하는 한 미국적 가치는 잘못된 가치로 전환되어 받아들여지기 쉽다. 그 많은 예들이 반미주의적 정책을 취하는 국가들이다. 역사적으로 반미주의 사회는 반민주주의가 함께 동반하였으며 지금까지 쿠바, 이란, 이라크, 북한 등 반미주의 노선이 가장 강했던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민주주의가 가장 제한되어 있는 국가들이라는 점이다.

비록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지라도 반미주의와 반민주주의와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그것은 개인 재산권(property rights)을 인정하지 않고 시장경제(market economy)를 거부하며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포함하여 반미주의 국가들에게 경제적 번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대외적 폐쇄체제를 유지하며 자유스런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정치적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⁸¹⁾

그 결과 세계주의적 개발체제와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사회에 반미운동은 폐쇄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반미운동의 폐쇄주의는 바로 한국 반미운동의 원류인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유사 종교체제의 유지와 관련된 것이다. 북한은 온 국민에게 지도자에 대한 신격화와 쇄뇌교육을 자행하고 맹목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사회를 만들어왔다. 북한의 헌법 서문만을 보더라도 불과 두 페이지도 안되는 불량의 서문에 ‘김일성’이라는 개인의 이름이 무려 17번이나 들어가 있다. 김일성을 ‘수령’, ‘창건자’, ‘시조’라고 부르며 ‘민족의 태양’이니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자 ‘위대한 인간’이라고 반복하고 있다.⁸²⁾

북한이 근대국가 체계를 갖춘 정상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미운동은 그 나라가 가장 철저한 자주 혹은 자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반미운동 노선을 걷는다는 이유만으로 북한 체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세계 종교관련 기관에서는 이미 주체사상을 2,000만

81) W. Beach & G. O'Driscoll, Jr. The Role of Institutions: In Economic Growth: an Introduction to the 2000 Index(The Heritage Foundation, 2000).

8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 채택).

의 신도를 가진 세계 제10위의 종교로 규정짓고 있는 바,⁸³⁾ 이것은 국가체제를 신정(神政) 체제로 만들고 그것도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특정 개인을 우상숭배적 사교(邪敎)라 할 만하다.

그런데도 북한체제에 우호적이고 반미주의를 부추기고 지원하는 조직적인 세력으로 인하여 반미운동은 매우 가치있는 일로 전환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반미운동적 차원에서 자살한 사건을 가지고 ‘단순한 삶’을 넘어선 ‘참된 삶’으로 규정짓고 참된 삶의 추구가 위협받을 때 참됨을 증명하기 위한 최후의 유일한 수단으로 목숨을 던지는 것은 매우 가치있는 일로 만들어지고 있다.⁸⁴⁾ 그 결과 무엇이 우리사회의 발전방향이며 무엇이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인가에 대한 혼란을 가져오며 역사발전예 반하는 ‘북한적 체제’를 모델로 한 폐쇄주의를 지향하게 만든다. 더구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소중하게 지켜야할 자유와 평화, 시장경제 그리고 생명과 재산에 대한 가치 순위와 중요도가 급격히 와해되면서 ‘주체’니 ‘자주’니 하는 친북한적 ‘가치’로 대체되고 있다. 또 다른 의미의 대북 사대주의라 할 만하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 동안 걸어왔던 정상적이고 성공적인 근대국가 발전과정을 역류시키는 퇴영적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83) <http://www.adherents.com>

84) 강정인, Ibid, p.11. 한편 당시 시인 김지하와 박홍 총장은 남의 죽음을 정치적 목표로 이용하고 있으며 배후에 죽음을 조종하는 선동세력이 있다는 말로 정반대의 논리에 선 바 있다.

VII. 결 론

한국사회의 반미운동은 그 출발과 성장 자체가 정상적인 한미간의 국가관계의 과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정치투쟁에서 시작된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미국의 군사적 체제 지원을 차단할 목적을 가진 북한의 반미전략과 이에 부응한 반미운동 세력의 목적의식적 투쟁의 결과가 한국 반미운동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반미운동은 국제적 냉전체제의 와해와 러시아 및 중국과의 수교, 그리고 북한과 비교한 한국의 상대적 성장에 따른 체제위협 감소라는 환경에서 더욱 격화될 수 있는 여건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반미운동은 단지 군사적인 안보문제를 떠나 경제안보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선진체제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및 인간안보를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반미주의 속에 내재된 반서구주의와 폐쇄적 민족주의, 그리고 국제경제 체제로부터 민족경제나 민족공조적 방향을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임에 따라 경제여건을 악화시키는 기반이 되고 있다.

미국은 특정 국가중의 하나이지만 세계적 수준의 각종 제도(institution)를 만들고 지켜 가는 특수 국가이다. 미국은 경제규모, 과학기술, 민주주의와 정치제도 그리고 삶의 양식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여전히 벤치마킹(bench-marking)해야 할 국가중의 하나다. 반면 반미운동이 옹호하거나 친근성을 내비치는 북한은 국제적 제도와 각종 지표에 따른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가서는 안되는 방향에 있는 나라다.

우리 사회의 반미주의가 국가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의 해결과 극복이라는 건전한 비판의 차원이 아니라 미국의 정책과 이념 그리고 각종 제도에 대한 부정까지를 포함한 전방위적 반미이고, 그 반미운동의 잠재적 대안으로 북한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은 반역사적이기까지 하다. 따라서 향후 반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한미관계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새로운 차원의 가치를 공유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 이상 군사적 안보 차원의 대북 억지나 반공주의(反共主義) 차원으로서의 극복하기 어려운 국제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미래지향적 한미연대를 구축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한미관계를 분석하고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미동맹의 최대문제는 공유할 비전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⁸⁵⁾

이제 한국은 미국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된다는 수동적 자세로는 미국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고 우리 사회에 고조되는 반미운동을 완화시킬 수도 없다. 이제 한국은

85) Fifty Year's Alliance: Reflections and Future Vision on the ROK-U.S. Security Cooperation(Seoul; Sep. 25-26, 2003), International Conferenc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RINSA,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The 50th Anniversary of the ROK-U.S. Alliance: The Past, present and Future(Washington, D.C.; Jun 25, 2003), Korea- America Society and The Heritage Foundation.

세계 12위의 경제규모와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한 국가의 격(格)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것은 한반도와 남북관계라는 협소한 지역 틀을 벗어나 동북아 및 세계의 질서와 평화를 위한 역할에 나서야 하며, 우리의 안정과 번영의 토대가 되었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확대 등에 대한 가치 지향적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그럴 때만이 보편적 가치추구의 과정 속에 미국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미동맹과 동일한 가치추구 국가라는 틀에서 그 역할을 함께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관계와 국익, 그리고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이 불가피하다. 현재 학교에서는 특정집단에 의해 주관적 입장에 근거하여 반미수업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군에 의한 범죄행위를 나열하고 미군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미국을 나쁜 나라로 묘사하는 수업이 공공연히 진행되는 이상 우리 사회의 반미화를 막기 힘들다. 그 외에도 미국 대통령을 ‘악의 화신’ 내지 범죄자처럼 만들어 컴퓨터게임을 하도록 하는 각종 소프트웨어가 초등학생 사이에 범람되고 있는 현실이 우리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기에 새로운 시민교육이 절실하며 그 시민교육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신념을 내재화하도록 하고 그러한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대외관계나 주변 각국에 대한 인식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개혁과 반개혁, 민족과 반민족 나아가 진보와 보수 등에 대한 각종 개념과 가치의 혼란이 가중되는 우리 사회에서는 계량적 지표로 검증할 수 있는 사회발전의 지표를 활용해야 한다. 각종 국제기구나 유엔 등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사회투명지수, 지니계수, 평등지수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국제경쟁력 지수, 언론자유도 혹은 인간개발지수 등에 이르기까지 지표를 갖고 평가하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 민족적인 것과 반민족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분적 개혁을 지표상으로 평가함으로써 개혁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반개혁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국방부, 정책기획국, “주한미군 전력의 경제적 가치평가”, 2000. 8.
_____, 『국방백서』, 2001.
_____,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2002.
_____, 『국방예산 현황』, 2002.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현장안정화 추진방안』, 2003.
통계청, 『주요 국가의 경제지표』, 2003.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02.
대한상공회의소, 『세계 500대기업 현황』, 2003.
한국과학기술협회, 『주요국의 연구개발동향』, 2003.
- 김진웅, 『한국인의 반미감정』, 일조각, 1992.
이장희, “반미감정의 원인과 그 해결 방안”, 『한국사회의 반미분위기와 한미동맹』, 한국국방연구원, 2002.
정항석, “미국 패권지속 경향에 관한 실증 고찰”, 『한국과 국제정치』, 제17권 제2호, 통권 제35호, 2001.
김일성, 『김일성저작집25』,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1996.
김용서, “대한민국의 이념 및 체제위기와 미국”, 『한국발전 리뷰』, 2003. 5.
김한웅, “전후 50년 한국경제성장에 끼친 한미동맹의 역할”, 『한국발전 리뷰』, 2003. 5.
이경남, 『큰 역사에 바치는 작은 증언』, 알파, 2002.
황명희, “한국대학생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반미의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89.
김한길, 『현대조선역사』,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83.
서울신문사, 『주한미군 30년: 1945-1978』, 서울신문사, 1979.
월간조선사, 『6·25 사변 피살자명부』, 월간조선사, 2003.
강정구, “한미관계와 반미감정”, 미국은 우리에게 있어 어떤 나라인가?-반미, 친미감정을 중심으로-, 경실련 통일협회 토론회, 2000. 8. 29.
강만길·서중석 외 “한국 근현대사의 성격과 민족운동”, 창작과 비평, 제16권 제2호, 1988 여름.
김광동, “한국 ‘진보주의’의 사상적 기반과 실천의 반진보성”, 한국발전연구원, 1996년 가을호.
강정인, “정치·죽음·진실: 1951년 5월 투쟁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002.
이한우, 『대한민국은 난민촌인가』, 책세상, 2002.
김한웅, “전후50년 한국경제성장에 끼친 한미동맹의 역할”, 『한국발전 리뷰』, 2003. 5.
사공일, 『세계속의 한국경제』, 김영사, 1993.
이호재, “전후 한미관계의 재조명”,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동아일보사, 1987.
함재봉, “The Heritage Foundation, 50th Anniversary of the U.S.-ROK Alliance Seminar”, Jul. 25, 2003.

- 강만길, “냉전세력의 정체와 극복방안”, 『이제 문제는 냉전세력이다』, 중심; 2001.
- 김수근, 『한국의 경제발전과 미국의 역할』, 김덕중 편, 『한국과 미국(2): 경제관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8.
- 김우택, “한·미 무역관계의 장래-채무국으로서의 미국의 통상정책과 세계시장질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김덕중 편, Ibid.
- 임광규, “대한민국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한국사회의 반미분위기와 한미동맹, 한국국방연구원, 2002.
- 정근모, “북한핵개발과 동북아시아의 안보”, 『한국발전 리뷰』, 한국발전연구원, 2003. 4.
- 전현준, 『북한의 대남정책 특징』, 통일연구원, 2002.
- 박종철, 『미국과 남북간: 갈등과 협력의 삼각관계』, 오름, 2002.
- 차영구, “북한핵문제의 전망과 대책”, 한국발전연구원 강연회, 2003년 6월 19일.

외국문헌

-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Paris: OECD, 1999.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1.
- WTO, *Trade Growth Slower in 1998 After Unusually Strong Growth in*, Geneva: Apr. 1999.
- IBRD, *The East Asia Miracle*, Oxford, 1993.
- SIPRI, *Year Book 2001*, Oxford: Oxford Univ. Press, 2001.
- Kim Seung-Hwan, “Anti-Americanism in Korea,” *The Washington Quarterly*, Winter, 2002. 3.
- Wohlforth, W., “The Stability of a Unipolar World,” *International Security*, Vol.24, No.1, Summer, 1999.
- Nye, J.,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Basic Books, 1990.
- Leckie R., *Conflict: The History of the Korean War*, Da Capo Press, 1996.
- Krueger, A., *The Developmental Role of the Foreign Sector and Aid*, Harvard Univ., 1979.
- Roger Cliff, *The Military potential of China's commercial Technology*, CA: RAND.
- Ikenberry, G., “*Liberal hegemony and the future of American postwar order*,” in T.V. Paul and John Hall, (ed.), *International Order and the Future of World Politics*, New York: 1999.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ank Survey of Foreign Exchange and Derivatives Market Activity*, Apr. 1998.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The 69th Annual Report*, Basle: Jun. 1999.
- John K. Oh, “*Anti-Americanism and Anti-Authoritarian Politics in Korea*,” Kim Ilpyong(ed.) *The Korea in Transition: Implications for U.S. Policy*, Paragon House, 1998.
- Kim Jin Wung, “The Nature of South Korean Anti-Americanism,” *Korean Journal*, 1994.
- North, D and R. Thomas, *The Rise of the Western World: A New Economic History*, Cambridge Univ. 1973.

- Shepsle, K and B. Weingast,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mittee Powe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81, 1987.
- Risse, H., *A Smoldering Fire: Anti-Americanism in South Korea*, Master Thesis, Yonsei Univ, 2001.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Suggestions for Future ROK-U.S. Alliance," Fifty Year's Alliance: Reflections and Future Vision on the ROK-U.S. Security Cooperation, Seoul; Sep. 25-26, 2003, International Conference.
- Huntington, S. "The Lonely Superpower: U.S. Military and Cultural Hegemony resented by Other Powers," *Foreign Affairs*, Vol.78, No.2, Mar. 1999.
- Parker, W., "Europe, American and the Wider World," Vol.2. American and the Wider World, Cambridge Univ. 1991.
- M. Abramovitz & P. David, "Convergence and Deferred Catch-up: Productivity Leadership and the Waning of American Exceptionalism," *The Mosaic of Economic Growth*, eds. by R. Landau, Stanford Univ. 1996.
- Maddison, A., *Dynamic Forces in Capitalist Development: A Long-Run Comparative View*, Oxford Univ. 1991.

반미운동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2002년 6월 21일 1판1쇄 발행

2020년 11월 12일 1판2쇄 발행



발행처	자유기업원	발행인	최승노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산림비전센터 7층 (07236)		
전화	02-3774-5000	팩스	0502-797-5058

※본 파일은 2002년 발행한 NGO시리즈 NO.6 『반미운동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책을 재편집하여 PDF로 변환한 것입니다.